

## [ 참고문헌 ]

- 고경환·장영식·박승화·이혜숙·조철환, 『사회복지지출 추계를 위한 한국종교계의 사회복지시설지 원금 실태조사 2001-2003』,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고경환,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94호 (2011-26), 2011.
- 고병철, 『한국의 종교 현황 조사연구』, 서울:종교문화연구원, 2008
- 김영중·김신열, 『민간 복지 활성화에 관한 연구』, 기획예산처.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2012.
- 서상현, 『사회복지법인 이사역할과 조직성과에 관한 탐색적 연구』, 韓國地方自治研究, 第8卷 第3號(통권17호), 103~125.
- 손병덕, 『교회사회복지』, 서울: 학지사, 2010.
- 유의웅, 『현대교회와 사회봉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출판국, 1991.
- 이상열, 『사회봉사의 신학과 실천』, 서울: 한울, 1992.
- 정무성, 『한국사회복지실천현장의 위기와 과제』,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2004.
- 칼빈, 『기독교강요』, 원광연 옮김,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4
- 행정안전부, 『법인통계자료』, 2011.12.
- 행정안전부 공고 제 2012-260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2012.
- Hernan, R. D. & Renz, D. O. (2000). Board Practice of Especially Effective and Less Effective Local Nonprofit Organization. *American Review of Public Administration*, 30(2): 146-160.

## 사회복지/02/발표논문 요약본/

### 사회복지 이슈와 기독교세계관

강상우 (고구려대 교수)

#### 초록

본고는 오늘날의 사회복지 이슈에 대해서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오늘날 이슈가 되었거나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복지에 대한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연구 문제 1: 복지 논쟁: 복지에 대한 논쟁은 색깔논쟁인가?

연구 문제 2: 복지 이슈: 구체적 복지 이슈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는가?

2-1: 복지 범위: 복지의 범위는 보편복지인가 아니면 선별복지인가?

2-2: 복지 목적: 복지의 목적은 사회적 책임인가 아니면 진도인가?

2-3: 문제 원인: 사회문제의 원인은 개인에게 있느냐 아니면 사회적 구조에게 있는가?

위의 사회복지 이슈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복지에 대한 논쟁은 색깔논쟁인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논쟁은 나쁜 색깔 논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실적으로 오늘 이 사회는 많은 위험에 과다 노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에 대한 담론은 진보적 좌파나 보수적 우파나 색깔 논쟁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대한 담론이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복지 담론은 복지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되어야 한다.

선별복지나 보편복지나 복지의 범위에 대해 논쟁에 대해서는 오늘날의 사회·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복지는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 가야만 하겠지만 이 경우 현실적으로 복지제정의 확충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사회적 책임인가 진도인가에 대한 사회복지실천의 목적에 대한 논쟁도 ‘극단적 진도의 수단’으로서의 사회복지실천은 지양(止揚)되어야 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한 삶을 통한 사회복지실천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문제의 원인이 개인이나 사회적 구조나에 대한 논쟁도 오늘날 사회 문제는 과거와 달리 세계화와 경제의 불평등 등의 복합요인에 의한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이나 저것이나’(either/or)의 이분법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개개의 사회문제의 원인에 대한 집중 분석과 더불어 사회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구체적 실천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I 들어가는 말

“기세기의 헌막에 예수가 다시 온다면 그는 복지에 대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과거에 그가 남긴 말과 삶의 족적은 복지의 미려에 어떤 교정과 정점을 줄 수 있을까.”  
(저정식 2012: 87-88)

“복음의 모든 면을 살펴보면 당신 자신의 시대가 직면한 문제만 제외한다면  
당신은 전혀 복음을 살피지 않은 것이다.”  
(Martin Luther King, jr의 말)

본고는 위의 제사(題詞)들에 대해 본 연구자 나름대로 응답하려고 한다.<sup>18)</sup> 기독교는 다음과 같은 것

18) “기독교가 여전히 살아 있는 신앙인 이유 중 하나는 기독교가 피조물처럼 성장하고 변화함으로 써 신앙 여정에 있는 이들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력과 의미

을 전제하고 있지 않거나 하는 생각을 한다. 먼저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All truths/s God’s), 또 “모든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All spheres belong to Jesus Christ). 그리고 “성경은 이즘(ism)이 아니라 캐논이다.”(The Bible is not the Ism but the Canon). 모든 진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어디에서 나왔던지 간에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그 진리에 대해 자유롭다. 모든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이기 때문에 구원의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主人)이 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케년, 영구불변의 자(尺)이기에 모든 것의 가치판단의 절대적 기준이 된다. 이는 모든 사상과 세계관과 이데올로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현실과 단절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본질적으로 하늘에 속한 자들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세상 속에 거주하는 동안 이방인으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의무를 지닌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적 사고(Christian Mind)를 가지고 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판단(判斷: filtering, 靈的分別)하는 삶을 살아가야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사고 안에서 기독교적 가치에 합당한 실천(實踐)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 현실에서 모든 영역의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질문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합당한 실천을 하여야만 된다.

본고에서는 연구자의 편이대로 사회복지 영역에서와 더불어 기독교사회복지의 영역과 관련하여 사회 복지현장에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거나 또 이슈로 남아 있는 문제들을 연구문제로 선택하여 기독교세계관의 입장에서 이 이슈들에 대해 답변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자는 이를 위해 연구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해 보았다.

## 1 연구 문제

연구 문제 1: 복지 논쟁: 복지에 대한 논쟁은 색깔논쟁인가?

연구 문제 2: 복지 이슈: 구체적 복지 이슈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는가?

2-1: 복지 범위: 복지의 범위는 보편복지인가 아니면 선별복지인가.

2-2: 복지 목적: 복지의 목적은 사회적 책임인가 아니면 진도인가.

2-3: 문제 원인: 사회문제의 원인은 개인에게 있느냐 아니면 사회적 구조에게 있느냐.

## 2 연구 범위

연구문제 1은 복지논쟁에 관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의 복지논쟁은 쉽게 색깔 논쟁으로 빠져드는 것이 현실이다. 복지에 대한 색깔 논쟁은 교회에서도 그 힘을 발휘하는데 복지 논쟁이 과연 색깔 논쟁인가와 더불어 성경은 복지에 대해 언급할 때에 이러한 언급이 과연 색깔 논쟁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sup>19)</sup>

가진 종교는 신앙의 이야기와 의미를 전수해주는 과거에 뿌리를 두면서도, 하나님의 지속적인 계시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미래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에 대답하는 것이다.”(Peters, 2012: 42)

19) 시시비비(是非非非)를 떠나서 다음의 글을 음미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본다. “유럽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이념들, 즉 시장 경제(자본주의)를 긍정하면서도 사회적 연대(solidarity)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적 민주주의(social democracy) 혹은 기독교적 박애와 이웃사랑에 가

연구문제 2에서는 오늘날 사회복지의 이슈가 되었거나 되고 있는 복지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먼저 2-1에서는 2012년 대선 때 뜨거운 논쟁의 중심 핵(核)이 되었던 복지 범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보편복지나 아니면 선별복지냐의 문제를 다룰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복지의 범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즉 보편복지에 대해서 말하는지 아니면 선별복지에 대해서 말하는가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2-2에서는 복지의 목적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세인들의 비판의 중심에 있는 문제로 과연 복지의 목적이 사회적 책임에 있는가 아니면 진도(선교)에 있는가에 관해서 다루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 2-3에서는 사회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성경은 사회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서 찾고 있는지 아니면 사회 구조에 찾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위의 연구문제들을 논구할 때에 순서상 먼저 (일반) 사회복지와의 관계에서 위의 연구문제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독교적 사고를 통해서 위의 연구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 II 본론

### 1 복지 색깔 논쟁(論爭)

“복지란 새로운 정책도, 좌파만의 논리도 전혀 아니다. 복지는 현대 모든 국가의 국민이 요구하는 권리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현대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기 때문이다.” (신광영 2011a: 53)

#### (1) 복지는 색깔 논쟁이 아님<sup>20)</sup>

복지는 오늘날 우리 사회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화두다.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지대한 관심의 영역이 된 것이 바로 복지 분야다. 여·야(與野), 보수·진보(保守·進歩)가 그렇게 복지를 외치고 민생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우리의 한 쪽에서는 바로 색깔논쟁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나와서 복지 문제를 자연스럽게 색깔(나쁜 이념)의 문제로 끌고 가버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이다.

여당이 진보정당의 정책을 그대로 복제하는 정도이니 이것이 코미디가 아니고 무엇이라(<조선일보>(2012/02/13) 일자기사; 김광기, 2012: 8 재인용)

보수 언론인 <조선일보>가 지적하는 것처럼 여·야 그리고 보수·진보할 것 없이 다 같이 복지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이념과 구별하기 어려운 정도로 상호 간의 복제(複製, 흉내 내기) 수준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논쟁은 항상 색깔 논쟁으로 변화되어버린다는 점이다. 사회복지의 역사를 볼 때에도

지를 두는 기독교 민주주의(Christian democracy)조차 찾아 볼 수 없다는 현실은 솔직하게 말해 비 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이다.”(장하준·정승일, 2006: 232-233, 정승일, “이 책을 마치며”에서). 20) 이는 맑스주의 저자(에컨대 Norman Ginsberg, I. Gough, C. Offe 등)들이 복지국가를 자본주의의 잘못된 과잉을 개선시키는 것에 불과하다고 한 비판적 주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Midgley, 1999: 174). 제임스 미글리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책임을 지야 한다는 사상은 좌파와 우파라는 정치적 스펙트럼 모두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Midgley, 1999: 248).

복지 논쟁은 우리나라에서 뿐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도 색깔 논쟁으로 쉽게 경도되었던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다.

### (2) 색깔 논쟁 사례

복지의 문제가 색깔 논쟁으로 변한 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의 경우다.

[2009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 때] 경기도의회에서 김문수 지사가 무상급식을 두고 사회주의 정책이라며 비판했고, 여당 정치인들이 ‘사회주의적이다’, ‘북한 같다’고까지 비판하면서 본격적으로 정치 쟁점화되었죠(이성이·김윤테, 2012: 25).

2012년 7월 11일 필리핀 결혼 이주 여성 출신으로 처음 국회의원이 된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이 주최한 다문화정책 토론회에서 일부 외국인 혐오 단체 회원들이 소란을 피운 사건이 그걸 잘 말해준다. 토론회 시작 직전 한 남성이 갑자기 단상에 올라 “정책 토론회인데, 반대토론자도 한 사람 없이, 마치 피고 없이 원고만으로 재판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며 “다문화 정책은 민족말살정책”이라고 큰소리로 말했다. 국회 직원과 행사 관계자들이 제지하며 퇴장을 유도했으나 10여 분 동안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남성을 중심으로 몇몇이 “너희 같은 반역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어렵다”, “김정일 같은 반역자들”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8월 1일엔 이 외국인 혐오단체 회원들이 서울 양천구 출입국관리소 앞에서 “역지 다문화 정책 당장 폐기하라”는 등의 편집 막을 내리고 사위를 벌였다(강준만, 2012: 462 재인용; <조선일보>(2012/07/12); <중앙일보>(2012/08/04) 기사 참조).

복지의 문제에 있어서 색깔논쟁은 무상급식의 문제와 다문화정책토론회뿐만 아니라, 초과이익공유제를 주장한 동반성장위원장이었던 정은찬 전(前)국무총리[2012년 3월 사퇴]도 색깔논쟁의 판에 들어갔다. 이념적으로 우파인 보수적 정책을 지닌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본인에도 복지의 색깔 논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외국의 복지 색깔 논쟁의 예로 들 수 있는 것으로 오늘날 대표적인 북유럽의 복지국가로 평가받는 스웨덴의 에른스트 비그포르스(Ernst Wigforss)의 경우다. 1930년대 이후 스웨덴의 재무 장관이자 사회민주당의 최고 이론가로서 대공황을 극복하고 스웨덴의 정치경제모델을 설계하고 건설하였던 비그포르스가 1928년에 부자들에게 높은 누진세율의 상속세를 부과해야할 법안을 발의하였을 때에 그의 반대편에 있던 보수당은 비그포르스가 속한 사민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비난했다고 한다.

보수당은 아예 체면 불구하고 “이번 선거에서 사민당이 승리하게 되면 러시아 뺨쟁이들이 밀고 들어와서 코사크(Cossack) 기병대가 우리나라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강간할 것이다”라는 말을 널리 퍼뜨렸다(홍기빈, 2011: 127, 73면 각주<sup>21)</sup>).

이 사건을 계기로 비그포르스는 “구제불능의 광신적 사회주의자”라는 딱지를 붙이고 죽을 때까지 살았다고 한다. 물론 그가 1977년 사망한 이후에 그의 비판가들이 그에 대해 심한 왜곡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말이다(홍기빈, 2011: 127; 또는 127, 72면 각주).

21) 이러한 이유로 1928년 스웨덴 선거는 ‘코사크 선거’로 불린다.(홍기빈, 2011: 127, 73면 각주).

그 외에도 1931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미국의 사회사업가인 제인 애덤스(Jane Addams)<sup>22)</sup> 애덤스에 대해서는 Acklams, 2008 참조]의 경우에도, 캐나다 서스캐처원(Saskatchewan) 주의 주지사를 지냈으며, 캐나다의 ‘매디케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토미 더글라스(Tomy Douglas)[더글라스에 대해서는 Margoshes, 2012 참조]가 의료개혁을 실시할 때에도, 심지어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2010년에 건강보험 논쟁이 한창 일 때 반대자들은 그를 사회주의자 호도(糊塗)하였던 그런 그가 2012년에 미대통령으로 재선되었다)도 의료보험의 개혁을 얘기할 때에 의료보험의 개혁을 반대하는 상대편으로부터 사회주의자(socialist)라는 색깔 논쟁을 경험해야만 했다.

### (3) 복지 출발은 우파(右派: 保守主義)

복지 색깔 논쟁에 앞서 알아야 할 것은 역사적으로 복지의 시작은 이념적으로 우파에 속하는 보수주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이다.(이성이·김윤테, 2012: 37-41; 이병천, 2012: 193; Wahl, 2010: 53). 심지어 [영국의 경우]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 보수적 우파가 아닌 진보적 좌파에 속하는 진보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홍기빈, 2011: 153-156). 이병천도 복지는 진보와 보수의 의제로 진보의 전유물이 아님을 지적한다. “일찍이 독일의 비스마르크 복지체제를 비롯해 기왕의 복지국가 경험들도 그러했으며, 이미 한국에서도 보수가 변신해 복지대안 경쟁에 나서고 있다.”(이병천, 2012: 193). 김윤테 교수도 이성이 교수와의 대담에서 같은 지적을 한다.

복지는 진보나 좌파들의 논리거나 우파의 복지에 부정적이라고 하는 건 유럽 역사나 세계사에 무지에서 나온 말이에요. 유럽에서 복지는 오히려 보수진영에서 나서서 추진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 사실 윌리엄 베버리지는 진보적 자유주의자였죠. 실제로 그는 자유당 소속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도 출마했구요. 그런데 베버리지는 사실 ‘복지국가’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던 계급 철폐와 산업 국유화 대신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보았죠. 그는 자유주의적인 성향이 강했던 사람이지만, 사회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이성이·김윤테, 2012: 37, 41)

보수적 우파가 주도해서 복지정책을 실시한 곳으로 대표되는 나라로는 독일을 들 수 있다.<sup>23)</sup> 옹커

22) “[제인] 애덤스는 193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이러한 평화운동과 함께 다른 사회복지가들은 국내에서 중요한 입법운동, 여성노동조건 개혁, 아동노동 통제와 입법, 의무교육, 이민자들의 문화적 적응, 군인과 선원보험, 장애급여 등과 같은 쟁점들과 함께 옹호운동을 하였다. 그런데 휴머니즘과 국제평화운동을 하는 사회복지옹호자들은 참전을 지지하던 미국의 중산층에 의해 배신자로 규정되었으며, 심지어 애덤스도 사회복지전문가들에 의해 배척되었고, 1946년 노벨평화상을 받게 될 불치(Emily G. Balch)는 해고되기도 했다. 이후 1919년과 1920년에 지배적이 된 반공운동은 사회주의자들과 공산당파들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사회개혁자들은 반미세력으로 규정하였다. 공공복지에 대해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아이디어는 ‘공산주의적’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 이러한 가치는 미국사회뿐 아니라 사회복지분야에서도 반영되었다.”(현외성, 2011: 121); 1948년 의회에서 미스터 공화당이라고 불린 로버트 태프트(Robert Taft) 상원위원이 뉴딜정책을 “사회주의적”이라는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국민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려고 할 때 당시 미국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가 주축이 되어 “사회주의화된 의술”이라고 호도하기도 했다.(Kurgman, 2009: 81, 92-93).

23) “사실 독일은 사회복지 분야의 개혁자적 국가이다. 비록 실업보험 제도는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도입(1905년)되었지만 독일은 산업재해보험 제도(1891년)와 의료보험 제도(1883년), 국민연금 제도

(Juncker) 계급에 속한 철의 재상(宰相)이라고 불리는 비스마르크(Otto von Bismarck, 1815-1898)가 바로 보수 우파에 속한 인물로 복지 정책 즉 국가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정책을 촉진한 장본인이다. 독일의 경우 무슨 이유로 우파에 속하는 보수주의에게서 사회복지정책이 발전하게 되었는가. 왈(S. Wahl)은 독일에서 비스마르크로 대표되는 우파가 복지정책을 들고 나온 중요한 이유를 다음과 적고 있다.

[독일에서] 우파가 복지정책을 들고 나온 데는 중요한 이유가 2가지 있었다. 첫째, 새로운 자본주의의 생산관계 아래서 열악한 작업환경이 근로자들의 건강과 복지에 매우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몇몇 지역에선 노동력이 실제로 건강 때문에 10분의 1씩 줄어들었다. 이는 곧 수많은 새로운 광산과 공장에 투입될 노동력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이는 또한 국가가 미래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둘째, 특히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두드러지고 있던 근로자들의 조직화와 과격화가 대립과 반란의 공포를 낳았다. 그런 상황에서 근로자들을 달래기 위해 공격적 보호 및 복지 조치들이 도입되었다. 거기엔 급격히 증가하고 있던 노동운동의 과격화를 누그러뜨리겠다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었다. 그 결과 최초의 노동보호법과 최소한의 사회적 부양 계획들이 다듬어지면서 처음으로 사회국가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당시 비스마르크가 새로운 '사회민주노동당'(Social Democratic Labour)을 금지시켰다는 사실이 그의 정치적 입장의 본질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Wahl, 2010: 53-54).

보수적 우파인 비스마르크가 복지정책에 적극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았다. 산업화와 자본화로 인한 발생한 많은 문제점을 봉인하기 위해서 바로 '당근'인 복지라는 카드를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김윤태 교수도 같은 지적을 한다.

1880년 대 독일에서 복지국가가 처음 생겨난 배경을 보면요. 노동계 세력이 커지면서 보수주의자들이 사회주의 탄압법이라는 '채찍'을 쓰는 한편, 산재보험이나 질병보험 같은 '당근'을 동원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안보 차원에서는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서였죠. 결국 보수주의자들이 자본주의를 합리적으로 개혁하고 계급갈등을 줄여 국가 경쟁력을 키우려는 의도가 작용한 거예요.(이상익·김윤태, 2012: 38)

보수주의적 우파가 사회복지에 적극적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진보주의적 성향의 좌파가 복지정책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으로 행동하였던 사례도 있다. 바로 영국의 경우 진보적 좌파에 속하는 자들이 당시 복지 정책에 대해 반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sup>24)</sup> 영국이 대공황으로 실업과 불황이

(1889년)를 최초로 도입한 국가였다.(191) 독일의 초창기 복지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개(皆)보편(universal coverage) 체제를 갖추었다는) 그 특성 면에서 이미 상당히 '근대화'되어 있었던 관계로 당시의 프랑스 좌파로부터 높은 찬사를 받았는데, 그와 관련 슈몰러(Gustav Schmoller)의 주도 아래 독일 역사학과 학자들이 유력한 사회정책연합(Verein fuer Sozialpolitik; Union for Social Policy)을 조직하였고, 거기서 사회복지 제도의 입법화를 강력하게 주장했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Chang, 2006: 191-192).

24) “프랑스 대통령 미테랑(F. Mitterrand)과 같은 유럽 사회주의자들과 Bob Hawke와 같은 오스트리아의 노동지도자들은 사회주의 사상과 거의 양립할 수 없는 실용주의 경제학과 사회정책을 도입하였다. 이들 모두는 복지국가 프로그램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비용절약적인 방법을 채택하였다”(Midgley, 1999: 258)는데 이 또한 좌파의 소극적 복지정책 사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제도 시행을 가능케 했던 1965년 입법안을 지지한 것은 바로 공화당이었고, 심각하게 이를 반대했던 것은 민주당이었다. 하원 최종투표에서 공화당원 70명이 찬성표를 던

영국 인원을 덮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노동당 내각을 이끈 맥도널드(Ramsay Macdonald)와 당시 재무부 장관이었던 스노든(Philip Snowden)은 자유 무역 정책을 강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긴급 재정을 편성하였다. 그와 반대로 그 당시에 영국의 실업대책을 강구한 쪽은 바로 로이드 조지(Lloyd George)를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자들'(Liberalist)이었다.(홍기빈, 2011: 153-156)

이러한 상황[대공황으로 영국이 실업과 불황을 경험하던]에서 현실적인 실업대책을 강구한 쪽은 오히려 로이드 조지(Lloyd George)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자들'(Liberals)이었다. 이들은 이미 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부터 케인즈를 위시한 진보적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을 규합하여 실업과 산업 합리화에 대한 오랜 논의를 축적했고, 성과물을 『실업 극복, 할 수 있다』(We Can Conquer Unemployment)라는 자신감 넘치는 제목의 책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동당은 이들의 논의에 병당한 태도를 보였고, 맥도널드는 이 책을 '사탄이 편집한 악마의 설교집'으로 여겼다고 한다. ... 토리당 출신의 모슬리 경(Sir Oswald Mosley)이 친구인 케이스의 도움을 받아서, 국제발행을 통한 재정 팽창으로 공공사업을 벌일 것과 보호무역으로의 전환을 내용으로 한 '뉴딜' 대책을 작성하여 맥도널드 총리에게 제출하였을 때, 조지 맥도널드의 반응은 냉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재무부 장관이었던 스노든은 모슬리 경에게 '자유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는 능력에 대한 신앙이 부족하다'는 호된 설교만 했다(홍기빈, 2011: 154-155 재인용).

좌파에 속하는 노동당이 복지를 외면한 영국의 경우와 반대로 우파에 속하는 비스마르크가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독일의 경우에서처럼 복지는 진보라든가 좌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지해야 한다. 다시 말해 복지는 나쁜 이념논쟁 즉 색깔논쟁을 넘어서(beyond ideologies)는 것으로 인식해야 한다.(본연구자가 얘기하고자 한 바는 다음과 같다. “나쁜 색깔 논쟁이 아닌 좋은 이념논쟁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사회를 분열시키는 색깔 논쟁 차원에서의 나쁜 이념 논쟁은 삼가야 한다”는 점이다.25))

“복지국가가 경제적 발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증거는 그 문제에 대한 강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이 문제에 대한 강한 판단은 주로 이념적인 성향이나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예측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처럼 경제적 변화가 제도적 변화를 통해 사회 지출의 증가속도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복지국가에 대해서 논의할 때에는 이데올로기적 접근에서 벗어나서 합리적 복지지출의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이은경, 2012: 377 재인용).

독일의 스벤 유헨(Sven Jochem) 교수는 “유럽복지국가의 형성과 변화: 유럽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에서 …… 그리고 북유럽 복지국가의 발전을 추동한 원동력은 세속적인 중도와 정당과 연합하여 사회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집권해 온 데 있으며, 또한 루터교적 노동윤리로 대표되는 종교적 토양도 오늘날 스칸디나비아의 ‘노동사회’를 형성하는데 중요하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꼭 좌파만이 복지를

진 반면, 민주당원 4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Krugman, 2009: 198)는 우파의 적극적 복지정책의 사례로 볼 수 있다.

25) “이념 논쟁은 해야 한다. 일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같이 이념 논쟁 자체가 비생산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회가 고도로 분화된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물론 사회통합은 중요하다. 하지만 이념의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덮어둔 채 이루어진 화합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생각이 차이가 있다면 이를 명백히 하고 그것을 기초로 서로 간에 타협을 모색해야 한다. 그것이 비록 단계적으로 갈등을 증폭시킬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생산적인 길이기 때문이다.”(장하준, 2004: 251-252).

주도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며, 또 단계론적인 생각도 잘못임을 강조했다. 즉 노동운동과 시민주의 정당을 강화하지 않으면 복지국가를 이루지 못한다는 생각은 틀렸다는 것이다. 자유주의 세력부터 진보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빈곤 퇴치, 사회 서비스 확대 등을 내세운 정치동맹이 힘을 지닌다면, 한국도 복지국가의 길에 들어설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패배적인 생각, 즉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복지 확대가 어렵다는 식의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주장한다.(조홍식, 2012: 11-13; Jochem, 2012: 105-150 참조).

과연 복지는 진보적 좌파만의 정책인가. 신광영은 이 물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한다. “다른 나라에서도 ‘복지’는 곧 ‘좌파’라는 등식이 실재할까? 한번 따져보도록 하자. 사실, 이러한 문제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논란이 된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것이 쟁점화 되지 않는다. … 개인적으로는 지난 1980년에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제5공화국은 복지국가를 추구한다.’라고 한 말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복지국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무엇이 복지국가인가?’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복지국가는 좋은 국가’라는 정도로만 이해했다.”(신광영, 2011a: 29-30). 사실 현실에 있어서 한국의 진보주의적 좌파라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복지정책의 경우 다른 나라의 시민주의 등의 정책과 비교했을 때에 그렇게 진보적이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현재 한국 진보세력이 주장하는 보육세, 무상의료, 무상급식, 비정규직 철폐, 제벌 개혁 등도 복지국가 체제가 지향하는 시민주의 노선의 요구를 넘지 않는다.”(오건호, 2012: 54).

#### (4) 현실에 잔존하는 색깔(나쁜 이념) 논쟁 트라우마

앞의 사례에서 보았던 것처럼 복지 논쟁은 이념(색깔)논쟁을 넘어서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현실에서는 복지논쟁은 항상 색깔논쟁으로 쉽게 경도되는가 하는 점이 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는 『우리는 한배를 타고 있다』(2012)의 엮은이인 윤홍식 교수가 쓴 “서문”(윤홍식, 2012a: 7-37)에서 정영철(2012: 101-115)의 글을 소개하는 부분의 내용에서 발견할 수 있다.

‘적과 아가 먼저 규정된 뒤에야 정책 경쟁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정영철의 지적은 매우 적절해 보인다. 분단체제는 남북한의 갈등만이 아니라 남북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마르지 않는 원천이었고, …… 국시가 된 반공은 모든 민주적 행위를 질식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다.(윤홍식, 2012a: 23; 정영철, 2012: 101-115 참조)

복지 정책을 말하기 이전에 이미 분단 이후에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이념적 규정(이 사회의 구성원들 속에 잔재해 있는 일종의 트라우마 trauma와 같은 색깔)이 먼저 작동하기 때문에 복지의 문제는 복지 정책과는 별개의 이념 문제로 곧 바로 직행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복지에 대해 말하기 전에, 들어보기도 전에 ‘복지=좌파=진보주의=붉은색=공산주의’라는 프레임으로 쉽게 기울고 만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 때문인지 몰라도 이 나라에서 복지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는 먼저 자신의 색깔이 붉지 않다는 것을 밝혀야 할 것만 같은 분위기가 만연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렇지 않다면 제3자가 보았을 때에 색깔논쟁으로 오해될 소지가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대거나 스스로 삭제해야 할 것만 같은 사회의 분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색깔의 오해 소지가 있는 것에 스스로 거리두기를 시작한다. 일종의 자기검열(自己檢閲)인 것이다. 사실 복지는 좌파의 전유물도 아니고 우파의 전유물도 아닌데도 말이다.<sup>25)</sup>

교회도 색깔 논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다. 교회 안에서도 색깔 논쟁의 원리가 사회에서와 같이 그대로 작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이는 다른 면에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신학적 주장과도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다). 교회 안에서 색깔 논쟁은 한국사회가 경험한 것보다 더 복잡하다. 교회 밖에서는 6·25(한국전쟁)와 조국의 분단으로 경험한 색깔 트라우마와 더불어 교회 안에서는 자유주의 신학과 더불어 사회 복음(Social Gospel)이라고 지칭되어지는 신학적 트라우마를 동시에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거 경험으로 인해서 인지 몰라도 교회는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특히 ‘사회적 행동’(Social Action)을 얘기하면 과거 경험의 잔상(殘像)인 조국의 분단과 더불어 사회 복음과 자유주의 신학이 성도들의 뇌리(腦裏) 속에서 무의식으로 존재하였던 잔상들이 의식의 세계론 떠오르게 된 것이다.(지금은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덜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면 사실 사회적 책임과 사회적 행동은 기독교의 아름다운 유산(heritage)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유산인 사회적 책임은 색깔 논쟁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포기되어지고 만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포기를 모버그(David O. Moberg)는 ‘대역전’(The Great Reversa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sup>27)</sup>

교회도 색깔 논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다음 사례를 통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승구 교수는 자신이 번역한 로버트 웨버(Robert E. Webber)의 저서인 『기독교 문화관』에서 아에 “해방 신학” 부분을 생략하여 번역하였다. 이는 니콜라스 윌터스토프(Nicholas Wolterstorff)가 자신의 책 『정의와 평화의 입맞춤 때까지』(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에서 ‘세계-형성적 기독교’(World-Formative Christianity)<sup>28)</sup>라는 범주에 해방신학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26) 다음은 장하준(2008: 241) 교수가 들려주는 이야기다. “처음 영국에 유학을 갔을 때 스웨덴 친구를 한 명 사귀었는데, 그 친구는 스웨덴의 좌파 정부와 우파 정부가 80%인 실업수당을 70%로 낮출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싸우는 걸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우파 정부라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좌우의 판 자체가 다릅니다.”; 다음은 정당의 이념이 바꾸는 사례들이다. “벤스트라(Venstre)는 덴마크의 주요 정당 중 하나이다. 1870년 창립한 이래 귀족 세력을 대변하는 보수당에 맞서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유주의자 내지 급진파의 정당이었다. 1910년대 이후에는 중도와 정당이었다, 오늘날에는 조금 더 우경화되어 중도우파 정당으로 간주되고 있다. 참고로, ‘벤스트라’는 ‘좌파(left)라는 뜻의 덴마크어이다.”(Alesina and Glaeser, 2012: 173, 역주);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역사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있다. 남북전쟁을 경계로 민주당과 공화당의 노선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남북 전쟁 이전에 공업화가 진전된 북부를 기반으로 한 공화당은 산업사회를 주창하며 정부 역할을 강조한 데 반해 농업이 주류인 남부에 기반을 둔 민주당은 연방정부의 간섭을 싫어해 정부로부터 독립을 지향했다. 하지만 남북전쟁 이후 두 정당은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 공화당은 특히 경제적 보수주의와 맞물리면서 자유 시장에 기반 한 작은 정부를 옹호 주장했고, 민주당은 대공황 이후 정권을 넘겨받은 후 1960년대까지 정부의 시장 개입을 옹호하는 케인지언 모델을 현실 정책에 반영시켰다.”(정종태, 2012: 56-57).

27) 모버그(David Moberg)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포기에 대한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신학적 자유주의와의 싸움, 특히 (2) ‘사회 복음’에 대한 반발, (3) 인간성에 대한 환멸(염세주의적 인간관) (4) 전(前)친년설의 만연 (5) 중산층에 복음 전파 등이다(Stott, 2005: 27-30 재인용, Marsden, 1980: 85-93 참조)

28) 윌터스토프가 말한 ‘세계-형성적 기독교’란 무엇인가. “‘형성적(形成的, informative)’이라는 말은 ‘회피적(回避的, avertive)’이라는 말과 상반되는 개념이다. 삶에 대해서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척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 형성적(形成的, informative) 종교의 경우는 우리의 일상적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이승구 교수와 월터스토프는 칼빈주의적 신앙을 가진 분들에게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인가. 본 연구자의 추측일지 모르지만 아마도 어쩌면 ‘색깔 논쟁’과 더불어 ‘보수신학 수호’의 차원에서 이승구 교수는 책을 번역하면서 ‘해방 신학’ 부분을 생략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켈러(Timothy Keller) 목사에게서도 같은 맥락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왜냐하면 『탐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Generous Justice)라는 저서를 보면 켈러 목사 자신의 신학이 월터 라우센부쉬(Walter Rauschenbush)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책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기술한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의 켈러 목사가 월터 라우센부쉬에 대한 기술이다.

월터 라우센부쉬(Walter Rauschenbush)는 사회복음주의 운동의 토대를 놓았던 독일 침례교회 목회자로 1880년대 뉴욕의 빈민가(Hell's Kitchen) 한구석에서 목회를 시작했다. 이웃들이 겪는 끔찍한 가난의 실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그는 전통적인 복음전도 방식에 회의를 품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 반면, 인간을 빈곤으로 몰아넣는 사회구조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는 것에 반기를 들고 ‘영과 육 모두를’ 돌보는 목회를 시작한 것이다. 이런 방법론의 변환은 곧 신학적 인 전환을 불러왔다. 라우센부쉬는 성경과 대속에 관한 기존 교리들을 거부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필요가 없었으므로 그저 이웃 사랑의 전형이 되기 위해 돌아가셨을 따름”이라고 가르쳤다(Keller, 2012: 16).

계속해서 켈러 목사는 ‘프롤로그’의 주(註)에서 “지은이[월터 라우센부쉬를 치정]는 죄속론(penal substitution)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사악한 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반드시 동원되어야 할 원리인 희생적이고 이타적인 관용이자 인간 세계에 가득한 사회적 불의를 여실히 드러내는 사건으로 파악한다.”(Keller, 2012: 261, 프롤로그 3번 주(註))고 밝힘으로써 켈러 자신과의 라우센부쉬의 신학적 차이를 밝힌다. 여기서 켈러 목사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라우센부쉬의 책인 The Theology for the Social Gospel(Macmillan, 1922)이다. 정의(Justice)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켈러 목사는 왜 라우센부쉬를 언급하고 있는 것인가. 아마 켈러 목사 자신은 극히 자연스러운 문제라고 볼 수 있는 ‘정의’라는 문제를 다룸으로써 혹시 자기 자신이 급진적 신학의 소유자로 타인들에게 비추지 않을 바라는 마음에서 일가 그것도 아니면, 자신이 보수적 신학(성경에 충실한 신학)에 속하고 있음을 보이기 위한 것이었을까. 아마 둘 다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 본다.

### (5) 복지를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

우리사회의 사회(통계)지표는 어떠한가. 한마디로 말해 우리 사회의 지표들은 색깔 논쟁을 떠나서 복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sup>29)</sup> 이것이 현실인 걸 어떻게 하란 말인가.(본

삶에 무언가 열등한 것이 있음을 인식한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것을 묵인하고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혁하려고 애쓴다.’는 종교를 말한다.”(Wolterstorff, 2007: 25).  
29) 조금은 시간이 지났지만 다음 신문기사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직활동 포기’ 청년 백수 100만 명 넘었다” <한겨레>(2011/03/15); “1년 예산 ‘GDP 대비 복지지출’ 되레 줄었다” <한겨레>(2010/10/11); “3살 이상 유아 99.8%가 ‘사교육’ ... ‘교육비 타 추가출산 포기’ 43%” <한겨레>(2011/02/7); “기초 수급자 탈락통보에 노인들 잇단 자살” <한국일보>(2011/07/19); “복지부, 기

연구자가 제시하는 자료가 진보주의적 성향의 연구자들이 제시하는 자료라는 것보다는 그 자료가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것에 더 심각성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가장 최근 자료인 2010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은 2010년 한 해 동안 모두 1만5,566명이 자살했다.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31.2명으로 OECD 1위(세계 2위)다. 2위인 일본은 20명이 채 안 된다. 특히 10대에서 30대까지는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다. 한국은 출산율도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2011년 미국 중앙정보국 월드팩트북 보고서에서 세계 222개 나라 중 217위) 한국은 잘사는 사람에게는 천국이고, 못사는 사람에게는 지옥임을 높은 자살률과 낮은 출산율이 말해준다.(Galligan, 2012: 271-272, 이희재, “윤근이 후기”에서)

에컨대 2012년 초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최근 1년간 한 번 이상 정신 관련 질환을 경험한 사람이 전체의 1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니코틴 사용 장애를 제외하고도, 성인 10명 중 1명은 우울증, 공황 장애, 강박 장애 등의 정신 질환을 앓은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평생 1번 이상의 정신 질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역시 27.6%로 조사되었다. 성인 4명 중 1명은 평생 1차례 이상 정신 관련 질환을 앓는 셈이다(김호성, 2012: 197).

이미 가계 부채는 1,000조 원을 넘어가고 있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55% 수준으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직전 부채비율인 137%보다도 높다.<서울신문>(2012/07/11), 6; 박승희, 2012: 458 재인용)

2012년 7월 10일 보건사회연구원 발표하는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실린 ‘OECD 국가 삶의 질 구조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OECD 34개 국가를 대상으로 삶의 질과 연관된 19개 지표의 가중 합계로 ‘행복지수’를 구하여 비교해본 결과, 한국은 10전 만점에 4.20으로 뒤에서 세 번째인 32위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행복지수 점수는 OECD 국가의 평균 점수인 6.23을 크게 밑돌았고, 우리나라보다 점수가 낮은 나라는 터키(2.90)와 멕시코(2.66) 뿐이었다.(이상아·김윤태, 2012: 7 재인용)

2008년 현재 전체 인구 중 12%가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 차상위 이하의 저소득층은 24% 안팎으로 전체의 2배 정도가 된다. 치료를 포기한 이유가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경우 84%, 차상위 이하 저소득층은 90%정도였다. 건강보험과 공적 부조로서 의료 급여 제도가 있는 상황인데도 그렇다.(조경애, 2012b: 189-190)

초수급자 6만 명 ‘자격 박탈’ <한겨레>(2011/07/15); “복지제정 OECD의 절반 ... 서민예산 되레 삭감” <경향신문>(2011/02/23); “비정규직 평균 임금, 정규직 대비 57.3%” <YTN>(2011/05/27); “상대적 빈곤율 14.9% ... 소득불평등 갈수록 심각” <국민일보>(2011/07/11); “서울지역 중간소득 근로자 집 사려면 8년 8개월 한 푼 안 써야” <한국일보>(2011/07/19); “지난달 고용률 상승 불고 구직 포기 인구도 급증세” <경향신문>(2011/06/15); “최저임금 현실화 시급하다” <한겨레>(2011/06/27) 참조.

[표 1: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가구 비율(2008년)]

구분	의료급여		차상위		차차상위	일반	전체
	1종	2종	법정	소득			
가구비율(%)	23.5	24.7	26.88	20.46	16.18	8.35	12.07

자료: 신현웅·신영석·황도경·윤필경,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조경애, 2012b: 190 재인용.

위의 현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복지 담론은 색깔논쟁 즉 나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복지는 바로 우리의 삶의 문제라는 것이다. 교회도 복지를 얘기할 때에 과거 부정적 트라우마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할 것이다. 즉 복지를 색깔 논쟁이 아닌 삶의 문제로 바라봐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실이 복지를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왈(Asbjørn Wahl)은 린더트(P. Lindert)의 기독교(개신교와 가톨릭)가 복지의 문제를 볼 때에 처음에는 부정적으로 보았지만 경제의 침체라는 사회의 현실에 직시하면 서부터는 복지의 문제를 색깔(나쁜 이념)의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개하고 있다.

린더트(P. Lindert)는 비슷한 성격의 또 다른 재미있는 현상을 한 가지 지적한다. 유럽의 가톨릭교회와 가톨릭민주당과 기독교민주당들의 경우 원래 공공복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들은 교회와 가족이 그런 문제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1930년대의 불황과 두 차례의 전쟁을 겪은 뒤, 변화가 일어났다. 이제 이런 정당들에게도 국가에 의한 재분배가 보다 공정한 분배를 이루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졌다. 아울러 그런 조치가 공산주의의 위협도 물리칠 수 있을 것으로 받아들여졌다.(Lindert, 2004: 15; Wahl, 2012: 66 재인용)

알레시나와 글레이저(Alberto Alesina and Edward L. Glaeser)의 지적도 같은 맥락의 진술이라 할 수 있다. “월렌스키(Wilenski)와 같은 정치학자들은 더 큰 소득 재분배 정책의 결정 요인으로 가톨릭 정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유럽 기준으로 볼 때) 사회주의-가톨릭 연정의 시기에 아주 작은 정부에서 평균적인 규모의 정부로의 변화가 일어났다.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극좌 정당 못지않게 가톨릭 정당도 복지국가의 규모 축소에 반대한다.”(Alesina and Glaeser, 2012: 138)

오늘날의 현실에서 복지의 담론은 ‘색깔 논쟁’과는 전혀 무관한 ‘인간 삶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 어려운 사회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에서 출발해야 한다. 신학적으로 말해서 복지는 ‘색깔 논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삶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출발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서 삶을 영위하느냐” 하는 문제가 바로 복지의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물음이 교회 안과 밖의 복지에 대한 논쟁에서 가장 기본적인 물음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어느 개그맨의 유행어를 패러디해서 말하자면 복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색깔 논쟁’ 아니, 아니 되웁니다.”

복지에 대한 색깔 논쟁과 더불어 피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복지에 대한 담론을 일반적으로 “포퓰리즘”(populism)이라는 이름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물론 선거 때 표(票)를 의식한, 인기를 위한 복지 공약이나 정책을 충분히 있을 수 있으며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복지=포퓰리즘’이라는

일방적 이분법이라는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날 복지는 시대 요청이기 때문이다. 즉 경제적 현실이 복지에 대해서 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보수는 진보든 복지에 대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서로에 대해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 이를 잘 보여준다 할 것이다.

복지포퓰리즘을 말하는 자는 김윤태 교수의 얘기를 한번쯤 들어보아야 할 것 같다. “복지를 이야기하면서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는데, 나쁜 건 다 포퓰리즘에 갖다 붙이는 경향이 있어요.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엘리트나 귀족에 맞서 보통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책을 가리키는 말이지<sup>30)</sup>, 좌익이나 복지를 주장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이상아·김윤태, 2012: 85). 김 교수는 계속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라고 했어요. 복지는 곧 국가의 의무라는 애김니다. 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헌법에 위배된 주장을 하는 셈이죠.”(이상아·김윤태, 2012: 96)

### (6) 복지 빠르게 바라보기

앞에서 언급하듯이 복지는 인간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는 색깔 논쟁이 아닌 순수한 가치 논쟁(나쁜 이념 논쟁인 색깔 논쟁을 제외한 순수한 이념 논쟁, 또는 좋은 가치 논쟁을 의미)으로 가야 할 것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복지 문제를 바라볼 것인가. 복지 담론과 정책을 바라볼 때에 색깔 논쟁이 아닌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복지 정책의 수립자가 보수적 우파라고 해서, 아니면 진보적 좌파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비판하거나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복지 정책을 살펴보고 그 정책에 대해서 찬반을 표시하여야만 할 것이다. 누구나 자신이 처해 있는 자리(stance)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정책자가 처한 자리는 유동적일 수 있으며 이러한 유동적인 자리는 정책결정에 있어서도 유동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먼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물의 공급 정책이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들의 물 정책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이행이기 때문이다.

인종격리 정책(Apartheid)이 자행되던 시절에 저항 집단, 특히 아프리카민족회의(African National Congress, ANC)는 흑인 거주 구역의 가난한 주민들에게 물과 전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도록 독려했다. 불의의 정부에 돈을 줄 것이 아니라 원래 그들에게 속한 것이니 그냥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아마도 혁명을 위한 선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민족회의는 정권을 장악하자 먹는 물을 얻을 권리를 헌법에 포함시키기는 했다. 그리고 나서 넬슨 만델라 정부는 포괄적인 민영화 계획을 마련했다. 여러 다국적 기업들이 초청되었고, 그들이 도시와 농촌의 물 공급을 위임받았다. 저항 운동 당시에는 사회주의적 이상을 설교했던 그 정치인들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데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퀸스(Queens) 대학의 개발 연구소장 데이비드 맥도널드는 “그때 극적인 사고 전환이 이루어졌고 그것은 아주 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수년전 넬슨 만델라가 청중들에게 경청해달라고 요청했던 다음과 같은 말을 상기시켰다. “민영화는 우리 정부 정책의 기초입니다. 원한다면 나를 대적주의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30) “영어 ‘포퓰리즘’(populism)은 원래 나쁜 뜻으로 쓴 말이 아니었다. 포퓰리즘은 19세기 말에 소수의 이익만 추구하는 미국 주류 엘리트 정치 세력에 반감을 품고 미국의 서민들이 만든 ‘인민당’(People’s Party, 통칭 포퓰리스트당 Populist Party)에 몸담은 사람들이 추구하던 가치였다. 미국의 금권과 언론을 장악한 소수 1%가 하도 더럽히고 한국의 금권과 언론을 장악한 소수 1%가 하도 짓밟아서 오염어가 되었지만 포퓰리즘은 원래 ‘서민주의’를 뜻했다.”(Galligan, 2012: 271, 이희재, “울긴이 후기”에서).

그의 후계자인 타보 음베키(Thabo Mbeki)는 더 직설적으로 말했다. “나는 대치주의자다.”(Reimon and Felber, 2010: 99-100).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의 정책집행은 그 자신의 이해관계(대통령 당선과 재선) 때문에 복지와는 거리가 먼 차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바마 미대통령이 의료 보편을 개혁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그가 실행하고 있는 복지정책이 모두 합당한 것이 아니며, 그가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의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의 정책이 모두 진보적인 친복지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대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적 접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다음 예를 한번 보자. “오바마와 연준(FED)이 어떤 짓을 했는가? 오바마는 금융위기를 호기로 삼아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그가 한 일을 그 이전 정권과 비교해보면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그는 월가에서 지원한 정치후원금의 최대 수혜자였으며, 그렇게 당선된 자가 걸로 금융개혁을 이루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것은 지나가는 개가 웃을 만큼 허황된 것이다. 그가 선택한 관료들은 재무부를 비롯해 모두 월가와 한패거리다.”(김광기, 2012: 136). 정중태는 전미총기협회(NRA)의 위력을 보여주는 사례를 통해서 (복지)정책에 이해관계가 얼마나 작용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NRA의 지원자격으로 2008년 대선에서 공화당 맥케인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된 오바마는 3년 후인 2011년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총기소유 제한을 추진했다.[물론 2012년 재선된 오바마 대통령은 다시 총기규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이 소식을 들은 NRA 회장 웨인 라피에르(Wayne LaPierre)는 ‘해 내가 수정헌법 2조를 무시하는 데 평생을 허비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딱 한마디를 던졌다. 그 뒤로 총기소유금지 법안 추진은 없었던 일이 돼버렸다.”(정중태, 2012: 40).

정책 결정자는 어느 누구도, 어느 집단도 자신의 삶의 자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책자들이 제시하는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접근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색깔 논쟁과 무관하게 말이다. “누구도 자신의 자리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은 신앙적 측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권위에 더욱 순종할 필요가 있음을 방증(傍證)한다. 즉 기독교세계관의 관점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The Bible)이 캐년(The Canon)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독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제도들은 단순한 사회적 ‘안전망’ 이상의 것이”(Chang, 2006: 189)며 “... 잘 살펴서 해야”(박승희, 2012: 46)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2 구체적 복지 이슈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사회와 교회 내에서 구체적으로 복지와 관련하여 이슈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구체적으로 사회에서 대선과 관련하여 이슈가 되었던 문제는 복지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였다. 즉 보편복지인가 아니면 선별복지인가 하는 문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아직도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교회 안에서 이슈가 되고 있지만 교회 밖의 체인들이 주시하고 있는)는 복지의 목적에 대한 것이다. 즉 기독교사회복지의 목적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다. 사회적 책임이 기독교 사회복지의 목적인가 아니면 전도(선교)가 기독교사회복지의 목적인가라는 문제다. 마지막으로 복지 이슈로는 우리 사회와 교회 안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로 빈곤으로 대표되는 사회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사회 문제의 원인이 개인에게 있느냐 아니면 사회적 구조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다.

## (1) 복지 범위: 보편복지나 선별복지나

“어제는 복지가 아니라 ‘어떤 복지국가인가’가 문제가 되었다.”  
(신광영, 2011b : 202)

### ① 선별/보편 복지 논쟁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논쟁(오건호, 2012: 29-40; 조경애, 2012a: 18-84; 윤홍식, 2011: 171-198; 김윤태, 2010 참조)은 2009년 경기도교육청 보편 선거에 당선된 김상곤 교육감이 무상급식을 전면화를 추진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당시 김 교육감은 급식의 기본권적 특징을 내세우면서 보편복지 측면에서의 무상급식을 내세웠으며, 이와는 반대로 한나라당과 보수적 태도를 지닌 집단은 제한된 재원으로 보편적 복지는 어렵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끔 재원의 합리적 사용을 이유로 선별복지를 내세웠던 것이다. 이는 후에 서울 시장이었던 오세훈이 자신의 중간평가를 묻는 하나의 방법으로 ‘무상급식’의 찬반을 묻는 문제로 사용하였고, 그 후에는 2012년 대선의 복지 분야에서 대통령 후보자간의 복지 정책 마인드를 묻는 과정에서 보편복지와 선별복지라는 프레임으로 복지논쟁의 중심축의 하나로 차이하게 되었다.

### ② 양자(兩者)의 차이

오건호가 [표: 우리나라 복지 유형 및 논점]에서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선별복지나 보편복지의 논쟁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와 사회수당에서 일어나는 논쟁이다. 물론 의료분야에서도 무상의료에 대해서 논쟁되고 있지만 말이다. 일반적으로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에 대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예로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다.

[표 2: 우리나라 복지 유형 및 논점]

구분	제도	특징	논점	과제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자활지원 등	취약 계층	급여 수준	재정확충
사회보험	연금, 의료, 고용, 산재 등	모든 계층	사각지대	노동시장 개혁
사회서비스, 사회수당	급식, 보육, 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 등	모든 계층	보편/선별 여부	재정 확충, 인프라 공공화

자료: 오건호, 2012: 34.

그렇다면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 자산조사(means test)를 통한 일부 취약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느냐 즉 대상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31) 이는 서비스의 필요를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해결하느냐의 차이이다. 선별복지는 일차적으로 서비스

31) 한국에서 ‘보편적 복지’와 ‘잔여적 복지’에 관한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무상급식 논쟁이 대표적인데, 무상급식의 전면 실시로 모든 국민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편적 복지는 자산조사와 빈곤층에 대한 표적화 없이 모든 시민을 조건 없이 포괄하는 정책을 가리킨다.(김윤태, 2010: 40).



의 필요를 기본적으로 개인이 가족이나 시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며, 그에 반해서 보편복지는 서비스의 필요에 대한 해결을 개인이 아닌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조경애, 2012a: 40) 그렇기 때문에 빈곤 등의 원인이나 책임에 대해서 선별복지는 개인에게 있다고 보는 논리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보편복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구조적 모순에 그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보는 사고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복지권에 대한 태도에 대한 차이로도 나타나는데, 보편복지는 복지(권)를 계승이나 경제적 수준을 떠나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 바라보는 일종의 인권으로 받아들이는데 비해 선별복지는 복지(권)를 부정적인 의미로 묘사함으로써 복지(권)를 자신들의 권리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선별복지에서 복지(권)는 사회적 실패자 또는 경제적 약자라는 이미지로 쉽게 연결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오건호, 2012: 30) 제정에 있어서의 양자의 차이점의 경우, 선별복지는 제한된 재원의 배분에 있어서 합리적 배분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비해 보편복지는 세금의 수용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할 수 있다(오건호, 2012: 30).

### ③ 양자 논쟁에 대한 평가

선별복지다 보편복지다의 논쟁의 경우 실제 실익(實益)이 있는 유익한 논쟁인가. 이에 대해서 한번 자문해보아야 할 것 같다. 조홍식 교수는 선별적 복지나, 보편적 복지나 하는 복지 선택을 두고 벌이는 논쟁은 다른 논쟁들 즉 복지과 경제성장 간의 케케묵은 담론이나, 복지과 재정에 관한 논쟁들과 비해서 보았을 때에 이들의 논쟁에 비해서는 상대적(소극적)으로 생산적인 논쟁이라고 평가한다(조홍식, 2012: 38). 장은주는 선별적이나 보편적이나와 같은 것은 그 자체로는 그다지 생산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조금은 엉뚱하기까지 보인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지를 얘기하면 보수-우익에서는 재정의 건전성이나 올바른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좌파의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공격하는가 하면 진보-좌파라고 하는 무리에게서는 원론적인 수준을 넘어선 구체적인 복지국가에 대한 로드맵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란단(장은주, 2012: 153). 오건호는 자신이 참석한 한 학회의 원로 교수에 말을 들어서 보편/선별 복지 논쟁은 복지전체를 선악 이분법으로 단순화하고 있는 점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견해를 내보이기도 했다고 한다(오건호, 2012: 31).

비록 보편복지나 선별복지나선 이원론적 복지논쟁이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지만 구체적으로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논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선별복지는 대기업 회장의 손자에게 무상급식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한다. 과연 그럴까. 무상급식이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인가. 무상급식이 주는 장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만약 사회의 상위층이 배제된 사회복지서비스는 질에 있어서 양질을 담보할 수 있을까. 사회의 상위층의 자녀까지 급식에 참여한다면 서비스의 질을 담보될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먹는 것에 관한 관심을 매우 큰 현실에서), 부유한 자녀들의 유익한 환경들이 서비스의 질에 대한 모니터링의 기능도 담당하게 될 것이다. 하루 별고 하루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프로그램의 질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여유가 있겠는가. 그만큼 배경적 지식이 없어서도 안 되겠지만,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일 것이다. 그렇지만 보편 무상급식이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한 관심을 여러 분야의 사람들로 인해 모니터링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무상급식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성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성장기의 인격형성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지닌다. 왜냐하면 가장 정서적으로 예민할 시기에 자신의 부모의 경제력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요소보호대상자(수급자)라는 낙인(stigma)을 경험하게 된다면 개인뿐만 아니

라 사회 전체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다.<sup>32)</sup> 김윤태 교수의 말이다. “미국 같이 선별적 복지를 실시하는 나라도 학생 중 50%에게는 무상급식을 준다. 공립학교는 거의 다 주고요. 단순히 급식만 주는 게 아니라 우유나 과일 등을 챙겨주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성장기에 고른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신경 써요.”(이상아·김윤태, 2012: 310). 무엇보다도 오늘날 경제 환경이 이 사회의 소수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처지에 있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윤홍식, 2011: 191-192). 미국의 경우 전체 국민 가운데 75세가 될 때까지 빈곤(절대빈곤 150% 이하)을 한 번 이상 경험해 본 확률이 무려 76.0%에 달했다고 한다(윤홍식, 2011: 192 재인용). 미국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도 빈곤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사회다.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복지는 세금의 수용성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점이다. 복지는 재원의 마련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보편복지가 아닌 선별복지가 될 경우 세금에 대해서 저항의 정도가 클 수밖에 없다. 자기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는 곳에 복지 세금을 납부한다면 이를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신과 관계있는 아들이나 그 누군가가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자라면 복지 관련 세금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장하준 교수의 말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보편적 복지와 함께하는 보편적 증세는 사회정의에도 타당하지만 정치적 지속성 측면에서도 필요합니다. 유럽의 복지국가가 지속될 수 있는 이유는 누구나 다 세금을 내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이와 대조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부자들에게 세금 조금 더 걸어서 극빈층에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지’는 내 것 일방적으로 빼앗아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란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지게 되는 거예요.”(장하준·정승일·이종태, 2012: 365). 보편적 보육서비스에 대해서 말한 이성이 교수의 견해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필요 재원은 마련하면 된다. 재벌의 손자에게도 복지를 주고, 부담 능력이 따라 더 많은 세금을 내게 하면 될 일이다. 그렇게 하지 않고 끝내 70% 선별적 보육 복지를 고집한다면, 나중에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격차와 함께 지속 가능성이 위험 될 것이다. 직접세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사람들은 소득 상위 30% 계층인데, 이들을 복지 혜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지속 가능성이 적다. 이들은 혜택도 보지 못하는 선별적 복지의 지속과 질적 향상을 위해 추가적인 세금을 더 낼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보다는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면서 자신들만을 위한 고급 시장주의 보육 복지를 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나 경제 활동과 복지 수혜의 주체가 되도록 보편적 보육 복지를 설계하는 것이 옳다.”(이상아, 2012: 171).

무상급식 뜨거운 논쟁과는 별도로 무엇보다도 보편복지의 성격과 지니고 있는 무상보육서비스는 무상급식과는 달리 아무런 저항 없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12년 3월부터 보편적 무상보육을 제공하기로 해서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유아 모두에 대해서 소득 하위 70%가 아니라 100% 모두에게 무상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이 선별적

32) 재벌회장 손자에게도 무상급식을 해야 하나? 부유한 아이들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재원낭비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무상급식은 단지 공짜 밥을 먹이는 것이 아니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함께 사는 법을 가르치는 교육이기도 하다. 호주에는 ‘The World’s Greatest Shave’라는 행사가 있다.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들을 돕는 기부 행사로, 이 행사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머리를 깎고 모금을 한다. 함양 치료로 머리가 빠지는 환자들의 고통을 함께 느껴보자는 취지다. 어린 학생들도 이 행사에 많이 참여하고, 같은 반 친구를 위해 함께 머리를 깎기도 한다. 연대와 협동을 배웠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급식비를 지원받는 아이에게 ‘가난’의 낙인이 적히는 한국 풍토에서는 무상급식을 통해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야말로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참여연대, 2012: 76).

보육료 지원이라는 당론을 버리고 복지에 대한 좌클릭을 함으로써 이러한 보육정책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왜 무상보육 서비스를 해야 하는가. 당시 우파 보수주의인 한나라당(지금의 새누리당)이 그러한 정책을 결정했기 때문에 좌파인 진보주의는 이를 반대해야 하는가. 그럴 수는 없다. 보수는 진보든 무상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에 따르는 부수적 복지 효과들이 따르기 때문에 무상보육서비스에 대해서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회서비스인 보육서비스의 보편적 제공은 모든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제도적 조치이자 강력한 저출산 대책임과 아울러, 사회계층 간 격차 완화, 보육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 여성고용의 확대, 양성평등 등 ‘복지와 경제의 통합적 발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기]”(이상아, 2012: 170-171)때문이다.

선별복지의 주장처럼 보편복지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가. “지난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GDP 성장률을 보면,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간주되는 스웨덴이 3.23%로 잔여주의 복지국가의 전형으로 간주되는 미국의 3.04%보다 높다”(윤홍식, 2011: 180)고 한다. 선별복지의 주장처럼 보편복지는 근로동기를 낮추는가. “복지와 근로 동기가 관련이 없다는 경험적 연구도 많다.(물론 그 반대도 많다.) 1980년대 미국에서 발표된 것 만해도 관련 저작이 100편이 넘는다고 한다.”(윤홍식, 2011: 181-182).

선별복지가 주장하는 가장 중요한 논점은 바로 제한된 재정(財政)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편복지의 장점이 많다고 하여 무작정 보편복지를 선택해야만 하는가. 선택은 항상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긴장의 형태로 나타난다. 선별이나 보편이나의 이분법적 논쟁은 이상(理想: 누구나 인간으로서 복지혜택을 누려야 한다)과 현실(現實: 그런데 현실적으로 잔고[殘高]가 얼마 없다.) 사이에서 오는 딜레마가 그 근저(根柢)에 존재하고 있다 점을 숙지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위의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주장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아무리 보편복지가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복지 현실에 있어서는 선별복지가 좋다, 또는 보편복지가 좋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복지재원이 확충됨으로써 보편복지가 실현(이상)되어야 할 것이지만, 복지재원이 확충(현실)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원한 바람으로 끝나기 때문이다. 선별복지의 주장 중에서 뿌리칠 수 없는 것은 복지재원의 절약함(재정확보의 필요성)이라는 현실에 대한 자각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선별복지와 보편복지의 논쟁에 앞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복지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가 문제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한된 재원을 가지고 사회복지를 실천해야 할 경우 어떤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보편복지를 실시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④ 문제는 재원확보

오히려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양자택일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기능(조홍식, 2010)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는 보편복지나 선별복지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이제 복지의 형태가 선별이나 보편이나를 떠나 더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복지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 선별복지에 비해 보편복지는 높은 수준의 사회지출을 요구한다. 이는 당연히 높은 조세부담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필요로 한 복지 재원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이유로 윤홍식은 “어떤 복지국가냐?”는 “어떤 조세체제를 갖느냐?”와 관련된다.”(윤홍식, 2012b: 260)고 지적한 것이다. 선별복지가 아닌 보편복지로 가고자 해도 그에 대한 복지 재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보편복지 정책은 그립에 딱에 불과하다. 현실과는 거리가 먼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이는 사회구성원 모두가 보편복지를 지지한다고 해도 보편복지는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 ⑤ 성경에서 찾기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에 관련 있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자. 출애굽 당시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나를 공급받았다. 빈자이든 부자이든 관계없이 일정량의 만나를 받았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 정착했을 때에는 이삭줍기(ἄριστος gleaning; 레벳, 레19:9-10; 신24:21; ʾוט2(이와)와 같은 제도를 두어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의 빈곤을 달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출애굽이후 광야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보편복지의 측면이 강한 만나(manna)를 이스라엘에게 공급해 주셨을까? 만나를 주시지 않아도 부자들은 먹고 사는 데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말이다. 왜냐하면 아마 그 당시 출애굽 사건은 소문에 소문을 물고 세상에 알려졌을 것이며, caravan과 같은 대상(隊商)들은 이매를 많은 부를 얻기 위한 기회로 노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많은 부를 가지고 나왔지 않았는가. 부를 가진 자들은 자신들의 돈으로 얼마든지 자신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구입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빈부의 격차를 떠나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을까. 그것도 모두 일정한 양으로 말이다. 아마 광야에서의 만남의 사건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루하루 의지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을 것이다.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진다는 메시지가 또한 만남의 공급하심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보편복지의 실천을 통해 이스라엘을 더욱 더 통합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이에 반해 정착 후의 이삭줍기는 모든 대상을 이 제도의 수혜자로 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빈곤한 자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이기 보다는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더 강하다. 특히 경제적 약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매우 선별적이다. 이스라엘이 사회적으로 안정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복지프로그램이 실천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더욱더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요(要)보호자들을 배려하는 프로그램의 실천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이삭줍기와 같은 선별적 복지 프로그램을 하나님께서 운영하시지 않았겠는가.

보편/선별 복지의 논쟁은 선·악 이분법적인 논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당시에 시대 상황과 경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보편복지의 실현을 이상(理想)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선별복지보다 더 강력한 안전망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처럼 불안한 사회에서는 더욱 보편복지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진다). 그렇지만 우리의 자리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보편복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복지 재원의 확충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복지 재원이 확충되었다면 누구도 보편복지의 실행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보편복지를 실천하고 싶어도 보편복지를 실천할 수 없고 다만 복지 재원에 맞는 선별 복지에 입각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줄 수 있는 ‘최소 안전망’ 수준으로 말이다.(아니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안전망의 수준은 재정과 밀접하게 관계있을 것이다). 안상훈 교수의 지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안 교수는 ‘통일 준비, 고령화라는 특수성을 가진 우리나라의 경우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되, 가장 급한 불부터 끄는 긍정적 선별주의 전략을 펴야 한다’며 ‘긴급을 요하는 국민층에게 복지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기회의 평등 차원에서 교육과 보육 면에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야 한다’”(매일경제 분노의 시대 특별취재팀, 2012: 262 재인용)

## (2) 복지 목적: 사회적 책임이나 전도나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필요할 때만 말하십시오.”  
(성 프랜시스 아사시(St. Francis Assisi)의 말: Burchett, 2006: 248 재인용)

복지 이슈 중에 교회 내에서 주요 이슈가 되면서도 교회 밖의 세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사회복지의 실천 목적이 무엇이나에 관한 것이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의 복지실천의 목적이 사회적 책임이나 아니면 전도나 하는 것에 관한 것이며, 교회 안에서는 물론 교회 밖에서 비판적인 자세를 추하는 이들에 의하면 교회가 사회복지 실천함에 있어서 ‘극단적 전도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특히 교회 자체의 예산이 아닌 수탁(受託)이나 정부의 보조금(補助金) 등으로 실시하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도 내놓고 전도의 목적으로 실천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이 세인들이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 ① 기독교 내 불일치

기독교 내에서 사회복지실천 목적에 대한 불일치는 왜 발생하는가. 무엇 때문에 한편에서는 전도를 강조하고 다른 편에서는 사회적 책임(사회적 행동)을 강조하는가. 물론 성경해석의 차이, 즉 성경을 보는 세계관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성경 해석의 차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성경해석의 차이뿐만 아니라, 이러한 차이의 기저(基底)에는 앞서 색깔 논쟁을 통해 본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색깔 논쟁이 작동한 결과라는 점이다. 6:25와 더불어 신학적으로 자유주의 신학과 더불어 사회 복음(social gospel)이 교회에 흡수되면서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자유주의 신학과 사회 복음과 거리두기를 하고자 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의 자유주의 신학과 사회 복음과 거리를 두는 편에서는 개인구원을 강조함으로써 ‘전도’를 강조하게 되었고 반대편에서는 사회구원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책임’ 즉 사회구조적 모순을 제거하기 위한 현실참여라든가 사회행동을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원규 교수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개신교 두 집단의 교리적, 신학적 차이는 크다. 보수 집단에서는 개인구원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선교는 주로 ‘교회의 선교’(Missio Ecclesiarum: 선교를 목적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 모으는 일이라고 본다.)를 뜻하며, 여기에서는 복음화(evangelization)가 중심과제가 된다. 신앙의 표준은 무엇보다 정론(正論: ortho-doxia)에 있으며, 교회의 핵심적인 기능은 선포(kerygma)이다. 복음주의(evangelism) 노선에서 부흥운동에 주력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진보 집단에서는 사회구원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선교의 목적은 이 세계에 자유와 평등, 사랑과 평화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를 표방하면서 인간화(humanization)의 성취를 추구한다. 신앙의 표준은 정행(正行: ortho-praxis)에 있고, 교회의 중심적인 기능은 봉사(diakonia)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에큐메니컬(ecumenical) 노선에서 사회운동에 적극 참여한다.(이원규, 2010: 251)

신학의 (수용의) 차이와 (사회적·신학적) 색깔 논쟁으로 인한 거리두기는 전혀 다른 성경해석과 신학 노선으로 이끌었던 것이다.(Moberg가 지적한 대역전 The Great Reversal 현상이 한국의 보수 교회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 ② 양자(兩者) 모두

역사적으로 교회와 성도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행하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다.<sup>33)</sup> 이러한 이유로 존 스토트(John R. W. Stott)는 사회참여는 복음주의적 유산이라고 말하였다. 사회참여는 복음주의적 종교의 자식이며, 복음주의의 쌍둥이였기 때문이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주의 전통은 전도와 사회적 책임이 항상 같이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이 더욱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다니사…… 가르치시며…… 전파하셨으며’(마4:23; 9:35),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신’(행10:38)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은 교회사 전체에 걸쳐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남의 이목을 의식하지 않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으며 왜 하고 있는지 규정한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한 채 두 활동에 모두 관여해 왔[기]’ 때문이다(Stott, 2005: 21 재인용). 계속해서 다음을 지적한다. “18세기 유럽과 아메리카에는 이에 대한 몇 가지 놀라운 본보기가 있다. 양(兩)대륙을 모두 휘저어 놓은 복음주의 신앙 부흥을, 복음을 전파하고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회심시켰다는 점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또한 자선활동이 널리 보급되게 만들었으며, 대서양을 사이에 둔 양 대륙의 사회에 심오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Stott, 2005: 21). 로널드 사이더(Ronald J. Sider)도 성경 전체의 흐름 중 큰 하나가 바로 사회적 책임임을 지적한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인해 이스라엘은 포로생활을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메시지를 통해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선포하셨다는 것이다. 사이더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구약]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이 가난한 자들을 확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켰음을 보여 준다. 물론 우상숭배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이유였다. 하지만 우리는 매우 자주 우상숭배라는 이스라엘의 ‘영적’ 문제는 기억하는 반면, 경제적 착취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성경의 가르침은 간과한다. (……)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독4:18-19]을 영해함으로써, 그 말씀의 분명한 의미를 피하려고 한다. 분명히 다른 성경본문들이 나타내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의 가리워진 마음을 열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고, 우리를 죄책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고 억눌린 자들을 해방시킨다는 말은 이사야서에 나온다. 구약의 배경에서 이 말씀은 의심할 나위 없이 물리적 억압과 포로상태를 언급했다. 누가복음 4장 18-19절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7장 18-23절에서 예수님은 물리적 육체적 문제를 언급하고 계심이 분명하다(Sider, 2009: 88, 92-93).

김한옥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구제와 봉사를 말씀 증거의 보조수단이나 부수적인 과제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기독교 공동체의 당연한 의미이며, 삶의 한 부분으로 알고 있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봉사를 교회사역의 한 부분으로 인정함으로써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게 되었다”(김한옥, 2001: 169) 사회적 책임과 전도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

33)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은 유대교에서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그 ‘3천 번 이상의 언급’ 중 다수가 『구약성서』에서 찾을 수 있다. 히브리어 ‘자선’에 해당하는 체다카(tzedakah)는 단순하게는 ‘정’의 뜻을 뜻한다. 그것은 유대인들에게는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이 삶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시사한다. 『탈무드』(옛 랍비들이 유대 율법과 윤리에 대해 논의한 기록물)에는 자신이 다른 모든 계명 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적혀 있으며, 유대인은 수입의 최소 10%를 체다카로 내놓아야 한다고도 적혀 있다.(Singer, 2009: 43 재인용).

에 이원규 교수도 같은 지적을 한다. “필자[이원규]는 한국교회의 보수-진보 두 진영이 각기 나름의 자랑스러운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중요한 교회적 사회적 결실을 맺어왔다고 생각한다. 개인구원에 진력하며 개인복음의 열매를 거둔 보수적 교회, 사회구원을 위해 싸워서 사회복음의 결실을 맺게 한 진보적 교회, 이 둘은 한국교회라는 수레를 굴러가게 하는 두 바퀴가 아닌가. 이 두 진영은 서로의 약점을 채워 주는 상보관계에 있다는 것을 오히려 고맙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이원규, 2010: 263).

### ③ ‘극단적 전도의 수단’이 되어버린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비판

교회 안·밖에서의 비판은 극단적으로 ‘전도의 수단’이 되어버린 사회복지실천이다. 사회복지를 실천함에 있어서 내놓고 전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국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기독교)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선교를 위한 거점이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물론 이러한 세인들의 비판은 기독교라는 특정 종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복지국가 위기 이후에 종교 사회복지의 주요한 기능의 축소와 변화를 가져온 반면 국가와의 공생관계를 통해 사회복지 제도 안에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종교 사회복지의 기능은 종교와 국가 간의 공생관계를 통해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성의 약화를 가져왔다. 즉 종교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 시설을 선교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는 반면, 국가는 적은 비용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종교에 전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국가와 종교의 공생관계는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데 역기능적인 작용을 초래하게 되었다.(권경임, 2011: 16)<sup>34)</sup>

김무성 교수는 우리나라 기독교사회복지자원의 심각한 3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a) 기독교복지자원의 절대량이 부족함, (b) 교회들이 사회복지자원을 단순히 선교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태도, (c) 교회사회복지자원의 비조직화 문제 등이 그것이다. 김 교수는 “..... 특히 선교의 수단화와 결합하여 지나친 물량공세 위주의 활동은 사회복지사업의 효과성을 낮추고 수혜자의 의존성을 조장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우려까지도 있다.”고 지적한다(정무성, 2005: 38-39). 김동춘 교수는 “디아코니아가 이웃을 향한 선한 행위라는 점에서 전도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스런 귀결이어야지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김동춘, 2003: 308, 4번 각주)고 지적한다. 김윤재도 “기독교인의 사랑은 사회적 관계를 초월해야 한다. 교회는 지역사회 복지사업 기관들과 협력해야 하며, 전도와 복지사업을 구별해야 한다.”(김윤재, 1999: 306)고 말하고 있으며, 박종삼 박사도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을 교회의 사명으로 철저히 인식하지 못한 교회 내적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전도를 사회복지사업과 직결하여 전도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태도”(박종삼, 1988: 145-146)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미국에서 무신론자들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의 강한 종교적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김윤성 교수는 자신이 번역한 책의 역주(譯註)를 통해 다음을 지적한다.

34) “특히 IMF경제위기에서 종교계의 사회복지가 신속하게 역량을 결집해서 대처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종교계의 순수하고 자발적인 사회복지의 노력들이 시설위탁으로 인한 종교 간의 과당경쟁이나 국가가 지원해 준 사회복지의 자원들을 선교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역기능을 초래하기도 하였다.”(권경임, 2011: 13).

“부시는 취임 후 백악관 내에 ‘신앙에 기초한 공동체 국민발의 백악관 사무국’(The White House Office of Faith-Based Community Initiative)을 설치했다. 사무국의 주된 목적은 외부의 도움을 적절히 필요로 하는 이들을 지원하는 데 있으며, 주요 지원 대상은 비행청소년, 출소자, 무주택자, 결식자, 폭력 피해자, HIV/AIDS 감염자, 빈곤가정 등이다. 순수한 사회복지자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 이는 부시 개인과 그 주변 인물들의 기독교적 성향이 강하게 깔린 일종의 종교적 사조직의 성격이 강하다.”(Lincoln, 2005: 159 역주, 강조는 연구자)

유신론자에서 무신론자로 전향한 바커(Dan Barker)도 이와 비슷한 지적을 한다. 그의 지적을 길게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조지 W. 부시는 그것을 역동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는 실험적인 ‘자비로운 선택’이라는 규정을 종교단체를 위한 연방의 주무관료 체제로 전환했다. 그의 ‘종교 단체를 위한 정책 법안 발의’는 교회와 주정부 사이의 경계를 지웠으며, 분리된 기구를 만들고나 비종교적인 척할 필요가 없이 모든 종교 단체가 연방에 돈을 신청하도록 장려했다. 대통령으로서 부시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백악관 안에 종교단체를 위한 정책 법안 발의 사무국의 개설하고 존 딜러리를 수장으로 앉힌 것이었다. 다른 부처 안에도 사무국들이 뒤따라 설립되었다. 2001년 이래 수많은 종교적 ‘자선 단체들’이 갑자기 생겨났는데, 모두가 공적 자금의 약속으로 초래된 것이었다. 많은 단체가 이전의 활동기록이 전혀 없었다. 자유훈복 선교를 수행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신앙을 찬양하는, 위장하지 않은 종교 기관들로 수십억에 달하는 공적 자금이 흘러들어 갔다. 이 단체들의 상당수에게 사회봉사는 영혼을 구제하고 복음을 홍보하는 선교 다음의 일이었다. 너무나 자주 사회봉사라는 미명 하에 학생과 죄수, 환자, 가난한 사람을 개종 시켰다.”(Barker, 2011: 468-469). “..... 또 기억할 만한 것으로는 에리조나 피닉스의 ‘멘토키즈 USA’가 있다. 이 단체는 워터게이트의 중죄인인 ‘최 콜슨의 감옥 목사’의 분과다. 이 단체의 공인된 목표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에게 멘토가 되어 주는 것인데, 합당한 목표인 것처럼 보인다. 누가 이 가난한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지 않았는가? 그러나 이 단체가 정부에게 위임받아 실행한 활동 중에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개종시키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 목사는 아이들과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 공금을 쓰고 있었다. 멘토키즈는 이 단체에 지원하는 멘토들을 교회에 다니는 복음주의 기독교인들로 제한했는데, 이들은 근본주의자의 종교적 임무가 지체인 진술서에 서명해야 했다.(Barker, 2011: 470).

사회복지실천을 사회적 책임이 아닌 극단적 ‘선교의 수단’의 형태로 실천하게 된다면, 교회 안과 밖에서 많은 비난을 물론이거니와 극단적 선교의 수단으로써 행해지는 사회복지실천 프로그램 그 자체에서도 효과성과는 별개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는 어느 누구에게나 이익이 될 수 없다. 다만 경비만 지출할 뿐이다.

“노숙인들은 구제금을 지급하는 교회를 코스별로 묶어서, 예를 들어, ‘서대문코스’, ‘목동코스’, ‘청량리코스’, ‘수원코스’, ‘일산코스’ 등을 이용하면서 생계비를 충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돈들은 저축의 용도가 아닌 경마장이나 도박으로 소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서출신문>(2008/12/09) 일자). 다음 인터뷰 내용은 교회 구제금과 관련한 노숙인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 예배를 한 시간만 하면 돈 1,000원씩 준다고 하더라구요, 교회에서요, (.....) 가면 밥을 무료로 자기가 피취요, 그러면 먹고, (.....) 한 여덟시나 그 정도에 예배를 시작해요, 그럼 그게 일반인들 받는 시간보다 노숙자들이 먼저 시작해서 받는 시간이에요. 그럼 하느님에게 쉽게 얘기해서 난 독실한 기독교 신자도 아니지만은, 우선 이 게(돈)준다니까 이거 때때 가서 인자, 고개 숙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자 목사님 말씀 끝나고, 찬송가, 뭣 하고, 말을 몇 마디 해주고, 그다음에 한 사람에 하나씩, 입구에 서가지고 1,000원짜리 하

나씩 전부 다 주는 거예요. 그거 받아가지고 나오고 나면, 또 그 옆에서 한 200미터나 300미터 떨어진 곳에, 그 교회가 또 시작을 한데요. 그럼 거기 가면 또 거기서 예배 보면, 또 1,000원 받고, 그레가지고 결국 한 2,000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는 쉽게 얘기해서 강술이 없다면 한 잔 까는 거죠.”(정수남, 2010: 427-428).

#### ④ 기본에 충실이 곧 복지실천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이 무엇이나 하면 ‘진도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both/and)이다. 극단적으로 사회복지실천을 ‘진도의 수단’으로 사용하면 세인들을 눈을 더 찌푸리게만 할 것이며, 이는 교회와 세상을 현(現)상태를 유지하게 하기는커녕 둘 사이를 더 멀게 만드는 역할만 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도나 사회적 책임이나는 기독교사회복지의 목적을 묻는 질문을 넘어서 우리가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을 위해 얼마나 기본에 충실했는지에 대해서 성찰해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기본에 대한 충실이 곧 바로 기독교사회복지의 실천의 기본이요 시작이기 때문이다. 기본에 충실한 사회적 책임은 곧 ‘진도의 수단’과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복음의 확산과 관련되어 지기 때문이다.

2007년 여름 노동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해고한 사태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기독교복지실천과의 관계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공의로운 경제활동이고 어디까지 하는 것이 공의로운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한국의 한 크리스천 기업이 몇 년 전에 비정규직 직원들의 계약 연장을 거부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적이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법에 위반되는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었다. 법대로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공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국진, 2010: 155)

그 당시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이 그렇게 세상에 아름답지 않는 소리를 내면서까지 비정규직과의 계약 연장을 거부하고 이들을 해고할 필요가 있었는지가. 더 좋은 방법, 더 은혜로운 방법은 없었는지가. 기독교인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기독교 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것과 전혀 무관한 것인가. 저임금의 비정규직을 위해서 예수의 마음으로 기업의 이익을 조금 양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을까. 티모시 켈러(T. Keller) 목사는 앤드류 카네기가 소유의 제철소에서 일한 노동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노동자의 말에서 기본에 충실 하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실천의 첫걸음을 보여준다.

카네기(Andrew Carnegie)는 2069개의 도서관을 건설했지만 …… 제철소의 한 노동자는 인터뷰에서 다수를 대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임금을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당시 노동자들은 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신발 밑에 나무판을 맨 채 12시간 교대근무를 해야 했다. 그리고 2주에 한 번씩은 비인간적인 24시간 근무를 한 다음 단 하루를 쉬었다. 그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주택조차 혼잡하고 더러웠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40대나 그보다 일찍 죽었는데, 그 원인은 사고나 질병이었고 …….(Keller, 2012: 110 개인용)

제철소의 노동자의 복지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카네기가 복지를 실천한다고 하면서 미국 도처에 많은 도서관을 지으면서 우리는 사회에 공헌하고 있소 라고 혼자 소리친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당시 제철소에서 노동자의 현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면 모를까 이러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카네기 당신 정말로 이 사회에 공헌하고 있소, 당신은 매우 대단한 사람이요”라고 인정하겠는가. 이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다. 세상에 복지를 한다고 생색(生色)내기 전에,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 자체가 (기업의 경우) 복지를 실천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이다. 복지의 실천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것이다. 교회와 성도, 그리고 기독교 기업이 사회복지 실천하는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기본을 잘 지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각자의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서 사회복지 실천한다고 하면 지나가는 개들이 웃게 될 것이다.

김두식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빈곤은 여전히 국가적 책임이며, 교회는 그저 국가에 예산 확충만 요구하면 된다는 식의 진보는 적어도 교회 내에서는 진보일 수 없습니다. 빈곤은 국가의 책임이기에 앞서 교회의 책임입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모두 국가에 맡기며 불변의 전폭적 신뢰를 보내는 것은, 국가를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일종의 우상숭배입니다.”(김두식, 2010: 99-100). 김두식 교수의 말처럼 교회가 국가의 복지정책과 무관하게 복지에 참여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국가의 재정상 그리고 행정상에 복지사각지대(福祉死角地帶)가 존재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의 말처럼 국가가 복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국가복지만능주의로 어떻게 보면 국가를 보는 하나의 우상적 시각을 내포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복지에 대해서 전부 담당할 수 있다는 생각은 유토피아적 발상으로 현실과는 동떨어진 진단이기 때문이다(복지국가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희망하는 것과 현실적으로 실현되느냐는 다른 문제이기도 하다). 교회가 빈곤과 같은 영역의 사회복지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기본에 충실한 행함이 전제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만약 사회복지 실천한다고 해 놓고 그리스도인 개개인이나 기업이 복지제정에 충당될 세금을 탈세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는가, 세인들은 이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겠는가. 아마도 그것은 어불성설이며 우리에게 코메디한다고 할 것이다.

금전적인 측면에서 기독교인의 사회복지실천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자. 무엇이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기본을 행하는 것일까. (1) 국가에 세금을 정직하게 납세하는 것, (2) 교회에 십일조를 정직하게 받치는 것, 그리고 (3) 물질이 허락된다면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금전적 측면에서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이다. 이 기본을 실천하는 것이 곧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지 않는 것이며, 또 사회적 책임을 하는 데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이 무엇인가, 진도와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다. 기독교사회복지실천의 목적이 진도나 사회적 책임이나는 논쟁을 뛰어넘어 나의 삶이 사회복지실천의 기본을 잘 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부터 자신에게 다시 해보아야 할 것이다.

### 3) 문제 원인: 개인이나 사회적 구조나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 사람들은 나를 성인으로 부른다. 내가 가난한 사람들이 왜 먹을 것이 없느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나를 공산주의자라고 부른다.”  
(브라질 올린다-레시페의 대주교 돔 헬러 카리야의 말: Chang, 2007: 289-290 개인용)

사회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논쟁 또한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한다. 오늘날 많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발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신사회위험(新社會危險:

New Social Risk), 또는 위험사회(危險社會)라는 말에서처럼 오늘날 사회는 많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실상 노출되어 있다. 오늘날 "Occupy Wall Street!", 또는 "We Are The 99%"라는 구호가 한때 매스컴을 장식했다. 그리고 빈곤과 실업 같은 사회문제를 다루는 책들이 많이 출판됨으로 인해 우리는 쉽게 그러한 책을 접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바로 그런 사회다.

### ① 현실 직시(直視)

사회문제(문)에서는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사회복지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비만(肥滿: Obesity)의 문제다. 무엇이 비만의 원인인가, 비만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답하는 것은 사회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간접적 대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만의 문제도 크게 보면 사회문제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비만의 원인을 말할 때 전적으로 개인의 문제로만 취급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어린 아이들의 비만의 경우는 더욱 더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기 어렵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비만의 원인을 얘기할 때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사회적 구조가 때로는 비만을 일으키는 데 일조하기 때문이다.

‘자유 선택[비만의 원인에 대한 개인적 차원에 대한 접근] 이론은 그 의미상 긍정하지 않다. 왜냐하면 특권층에게만 해당되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은 과제중 문제가 가장 적은 계층이다! 안잘리 자인(A. Jain) 박사는 『영국의학저널』에 다음과 같이 기고했다. “전문가들 대부분이 비만의 확산이 환경적 요인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수많은 연구들은 그 사실을 간과했다. 개인의 생활방식에 대한 간섭과 비만 약물의 효과에 대해 이제 현실적이 태도를 보일 때이며, 비만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의 치료보다는 공중보건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다” 2008년 7월에 영국 보건부장관도 환경적 요인을 무시하면서 개인의 책임에 비중을 두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표명했다. 그는 산업계를 포함한 전 부문을 향해 함께 비만을 막는 일에 참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호소했다. “우리 생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국가적 차원의 움직임이 필요합니다.”(Delpeuch, Maire, Monnier and Holdsworth, 2012: 212 재인용).

그래서 인지도 몰라도 위의 저서를 번역한 부회령은 번역서의 제목을 설정할 때에 원어의 제목인 ‘지구적 비만(Globesity: 또는 비만의 세계, 세계적 비만: Globesity라는 단어가 Global+Obesity의 합성어라는 점을 착안하면)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강요된 비만』이라고 정한 이유도 원저자들이 그 책에서 주장하고자 했던 아마 비만의 원인이 개인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구조적 차원도 존재하며, 어떻게 보면 비만에 있어서 개인적 차원보다는 사회구조적 차원이 오늘날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사회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과거와 다르게 사회구조적 차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이 다. 매일경제가 리서치 전문 업체인 엠브레인과 공동으로 2011년에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의식 설문조사(복수응답)에서 인생목표를 방해하는 요소를 묻는 항목에 대해서 개인 차원의 방해요소보다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방해요소가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매일경제 분노의 시대 특별취재팀, 2012).

주변 시기와 질투	4.5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	9.4
시간부족	9.8
능력부족	22
나태함	34.8
학연, 지연 등 사회적 차별	36.5
금전부족	39.4
노력해도 성공이 어려운 사회	43.3

자료: 매일경제 분노의 시대 특별취재팀, 2012: 35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2, 3) 결과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2012년 3월 현재 한국의 비정규직은 837만 명(임금 노동자의 48.0%)이고 정규직은 905만 명(52.0%)으로 추산(참여연대, 2012: 120)되고 있다.

	수(천명)				비율(%)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상용	임시	일용	전체
임금노동자(1)	10,899	4,997	1,525	17,421	62.6	28.7	8.8	100.0
정규직(2=1-3)	9,051			9,051	52.0			52.0
비정규직(3)*	1,848	4,997	1,525	8,370	10.6	28.7	8.8	48.0

\* 비정규직(3)=경기 임시 근로+한시 근로+시간제 근로+호출 근로+특수 고용+파견 근로+용역 근로+가내 근로 중복 제외) 자료: 참여연대, 2012: 119에 표의 일부분 수정 재인용

빈곤문제의 원인에 있어서도 오늘날에는 과거의 연구에서 지적되었던 개인적 차원의 태만이나 계층보다는, “워킹푸어”(Working Poor),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과 저임금 파트타임을 의미하는 신조어인 “맥잡”(McJob, McDonald+Job)과 같은 노동형태가 일반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불안정한 노동조건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의사(근로의욕)와 관계없이 빈곤의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빈곤은 개인이 게으른 탓이다? 빈곤은 결과일 뿐 아니라 과정이다. 우리는 다양한 자료를 거쳐 빈곤에 이르게 된다. 최근 심각한 문제인 빈곤의 대물림도 빈곤에 이르는 과정 중 하나다. 한국은 이미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에 접어들었고, 일자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안전망 또한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 현대의 빈곤은 결국 발전의 산물이며 사회의 구조적 산물인 것이다. 빈곤은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이전에 안정적인 일자리와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다각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면서 동시에 보편적 소득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참여연대, 2012: 16)는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회문제가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구조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주장들이 제기된다고 볼 수 있다. “과거에 ‘사회복음(social gospel)을 비난했

던 지도자를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제는 평화 이룩하기, 종족적 정의를 위하여 노력하기, 그리고 가난 퇴치를 포괄하는 그들 자신의 신학을 모색하고 있다.”(Cox, 2010: 203),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시위 현장에서 한 목사는 인간 확성기를 잡고 다음과 같이 소리쳤다고 한다. “신께 기도를 드려서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변화는 오직 여러분이 거리로 나설 때에만 일어납니다. 교회 밖으로, 거리로 나가십시오.”(n+1, 2012: 156-157), “세계 15위 경제대국이 란 지표가 무색하게 대한민국의 불평등과 부자유는 이념을 공소(空疎)하게 만들만큼 위태로운 지경으로 전락하고 있다. 국민 10%가 국부 75%를 포식하고 있고, 국민 10%가 사유지 86%를 독점하고 있다. 정신질환자가 278만 명을 상회하고 교통사고와 후천성 산재로 신체장애가 된 자들도 215만 명에 이른다. 도박중독자는 360만 명에 달하고, 매춘부는 120만 명, 절대빈곤 안동은 100만 명, 결식 미성년자는 60만 명, 가출청소년은 50만 명, 주민등록 말소자는 60만 명, 교도소 수감자 10만 명, 신용불량자가 380만 명, 잠재적 신용불량자는 400만 명이나 된다. 무엇보다 요즘 우리 사회의 중추를 휘청거리게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850만 명이라는 통계는 예수의 좌파 사실을 역사적 필연으로 만든다.”(차정식, 2012: 48-49).

## ② 편식(偏食) 그만

사회 문제의 원인이 개인이나 사회 구조에 대한 논쟁은 신자유주의 경제제도에 대한 옹호자와 비판자들 간에 벌어지는 ‘운전자 논쟁’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자본시장 자유화를 비판하는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한 건 일어났다면 운전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추론할 수 있지만, 같은 커브 구간에서 추돌사고가 잇따라 일어난다면 운전자보다는 도로 설계가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본시장 자유화를 지지하는 이들은 이렇게 반박했다. ‘차를 버리고 마차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다. 해결책은 고속도로를 넓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들은 도로 설계보다는 운전자 교육이 문제이며 여기에 치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판자들은 이렇게 받아쳤다. ‘도로와 자동차는 평범한 운전자를 염두에 두고 설계해야 한다. 노련한 자동차 경주 선수만이 도로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면, 무언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게다가 국제금융기구가 도로 체계를 수선한다며 제안한 방법은 도로 표시판을 개선하는 것(정보의 질을 높이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나마도 마지못해 하는 조치였을 뿐 아니라 불안전하기까지 했다. 가장 위험한 지역에 표시판을 세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Stiglitz, Ocampo, Spiegel, and Ffrench-David, 2011: 285). 신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책임에 강조점을 두지만 이에 대한 반대자들은 개인보다는 사회 구조가 지닌 문제에 대해서 강조점을 두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하나만 주장하는 편식은 올바른 진단이 될 수 없다. 물론 어느 하나가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개인적 차원보다는 사회구조적 차원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만 강조되는 양은 다른 쪽이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의 악화된 경제현실은 개인보다는 사회구조적 원인에 기인한 결과들로 인해 사회문제가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만은 사실이다.

빈곤의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회문제의 원인은 개인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인가 불라도 빈곤의 원인을 논하면서 켈러 목사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빈곤의 원인에 대한 성경적 시각”을 “성경 말씀에 따르면, 억압과 재난 그리고 개인의 도덕적 헤아말로 빈곤의 3대 원인이다.”(Keller, 2012: 76). 권명중 교수도 성경이 빈곤의 원인에 대해서 매우 다차원적으로 지적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가난의 첫 번째 원인은 게으름이라고 한다. 게으르지 않으면 적어도 가난은 면할 수 있다는 언급을 성경 속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다.(ex, 잠6:6-11; 잠10:4). …… 가난의 두 번째 원인으로 제시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다.(ex, 롯1-2장에서 롯의 선택) …… 가난의 세 번째 원인으로 꼽는 것이 불합리한 사회제도나 사회적 불의(不義)다. 종이나 노예가 합법화되는 신분제도에서는 하층민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무리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해도 ‘견딜 만한 수준의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 신분 세습 제도는 하층민들이 열심히 일할 동기를 빼앗아버린다. 또 권력자가 가렴주구(苛斂誅求)를 일삼고 부자들이 무자비한 착취를 일삼으면 많은 사람들이 가난으로 떨어지게 된다.(ex, 암5:11-12; 잠13:20; 미2:2; 렘5:27 등)”(권명중, 2008: 81-83 수정; 특히 “네 번째 이야기: 태초에 빈자가 있었다?”, 76-89 참조).<sup>35)</sup>

본 연구자도 가장 대표적인 사회문제의 하나인 빈곤의 원인에 대해서 다차원적 측면에서 고찰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개인적 원인, 환경적 요인, 그리고 구조적 요인으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그렇다고 이러한 요인들 간의 구분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각 요인들 간에 중첩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개인적 원인으로 게으름(파자부터 지적되고 있는 빈곤의 원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오늘날 게으름은 빈곤의 원인으로서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생각한다)과 더불어 개인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개인의 잘못된 선택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는 탐욕(貪慾)과 무지(無知) 그리고 자기과시(自己誇示)를 들 수 있다. 탐욕의 예로는 고위험 금융파생상품과 같은 고위험고수익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일종의 投機)를 들 수 있을 것이며, 무지에 대한 예로는 비대칭정보의 결과로 인한 금융업계의 고위험파생상품에 대한 불안진판매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며, 자기과시의 예로는 이웃효과(neighbor effect)와 지위상품(positional goods) 등에 대한 사치스러운 과소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환경적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자연적 환경에 속하는 가뭄과 홍수, 그리고 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빈곤을 그리고 구조적 요인으로는 사회구조에서 오는 빈곤으로서, 경제구조의 모순으로 인한 발생하는 빈곤, 인종주의와 여성차별에 근거한 빈곤의 발생 그리고 제3세계국가에서 나타나는 빈곤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다. 빈곤이 다차원적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회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한 요인만을 강조하는 것은 협소한 시각에 불과하다 하겠다. 협소한 시각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은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지니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 ③ 구조적 원인에 집중(集中)

사회문제를 올바로 보기 위해서 확인화된 이것이나 아니면 저것이나나 혹은 시야로부터 벗어나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으로 관점에서 사회문제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에 대해 살펴보는 자체가 필요하다 하겠다. 토니(Richard H. Tawney, 1880-1962)도 1931년에 출간한 자신의 저서 『평등』(Equality)에서 다음을 지적하였다. “빈곤의 문제를 연구할 때는 먼저 그 근원을 파악해야 한다. 빈곤 현상에 대한 고민은 그 다음의 일이다.”(Wahl, 2012: 287 재인용). 왈(S. Wahl)도 “…… 빈곤을 퇴치하려면 우선 그 원인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징후들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빈곤은 시스템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을 퇴치하려면 구조와 권력관계에 대한 공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35) “사회복지가 출현하기 훨씬 전부터 미국인들은 도움을 받아 마땅한 빈곤층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했다. 1834년 찰스 버로스(Charles Burroughs) 목사가 설명하기를 ‘빈곤을 이야기하려면 빈곤(poverty)과 거지근성(pauperism) 에는 차이가 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전자는 피할 수 없는 것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불가피하다. … 이는 우리의 잘못이 아니며 불운에 의한 결과이다. … 거지근성은 고의적인 실패와 수치스러운 나태함, 악의적인 습관의 결과물이다. 인간 창조된 끔찍함이고 치명적인 특성이며, 나쁜 원칙과 도덕의 통탄할 결과물이다.’”(Gilens, 2012: 96-97 재인용).

동일한 지적을 하였다(Wahl, 2012: 305-306). 다음은 켈러 목사가 자신의 책에서 하비콘(H. Conn)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다. 교회나 목회자들에 의해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얼마나 현실과 떨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홍콩에서 복음전도자로 활동하는 레이몬드 핑(Raymond Fung)은 섬유공장에서 일하는 직조공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했던 경험을 들려준다. 예배에 참석하려면 하루 품삯을 포기해야 했지만, 그 직원은 손해를 감수했다. 예배가 끝나고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직조공이 말했다. ‘설교가 감동적이었어요.’ 그날 말씀은 죄에 관한 것이었다. ‘게으름, 거칠고 급한 성격, 싸구려 대중문화에 빠져 사는 생활태도까지 전부 내 얘기더군요.’ 핑은 침을 꿀꺽 삼키며 흥분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과연 복음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되었을까?’ 직조공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실망감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에 관해서 일인반구 없더라고요.’ 그러고는 설교자가 거론했던 죄악들을 일일이 열거한 뒤에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고, 법으로 보장된 휴가를 주지 않고, 가짜 상표를 붙이게 하고, 야근을 하도록 강요하는 따위의 잘못은 전혀 지적하지 않았어요.’ 핑은 할 말이 없었다. 직조공이 다니는 회사의 경영진 가운데 몇몇이 교인이어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잘못에 관해서는 일철 언급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다. 그 공원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면서도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쪽짜리 설교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Keller, 2012: 98-99) 하비 콘은 이 이야기를 자신의 책에 소개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한편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억압적인 죄악들을 간과하는 복음 전도는 인류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가난한 농부들과 노동자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Conn, 1981: 18; Keller, 2012: 99 재인용).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지적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무엇이 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인가에 대한 고민이 항상 요구되어야만 할 것이다.

#### ④ 이젠 실천(實踐)

사회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만 할 것이다. 월터스토프(Wolterstorff, 2007)가 기독교를 “세계-형성적 기독교(World-Formative Christianity)”라고 지적했던 것처럼 변혁적 실천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실천을 얘기할 때 “생각은 지구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Think globally, Act locally)”라는 경구로 받아들인 신앙 공동체 또한 이러한 경구에 맞는 실천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하였다. 물론 실천에 있어서는 지역적으로, 개인적으로 차원에서 실천해야 하는 목표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천은 한계를 지닌다. 왜냐하면 사회문제의 원인에서 보았던 것처럼 사회문제의 원인이 결코 개인적이고 지역적인 차원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적이고 지역적 차원에서의 실천만으로는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다음 인용문은 지적은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개인적이고 지역적인 차원을 넘어 좀 더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영화 <불편한 진실>이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해 제안한 내용들은 우리가 흔히 ‘변기 물탱크에 벽돌 넣어두기’라고 부르는 것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갈수기 동안 변기 물탱크에 벽돌을 넣어두어서 변기 물을 내릴 때마다 물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라고 장려한다. 이 아이디어는 수압이 낮은 변기와 샤워기 꼭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되었다. 하지만 변기에 사용되는 물은 캘리포니아 주 전체 물 소비량에 비하면 지극히 적은 양에 불과하고 각 가정에서 소비하는 양을 모두 합해도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아주 적은 양에 불과한데 이는 캘리포니아에서 소비하는 물의 80%가 농업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가물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변기 물탱크에 벽돌을 넣는 것처럼 협소하고 개인적인 방식에 의존하려는 시도는 한쪽 끝이 막힌 골무로 오대호의 물을 전부 퍼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Ehrlich & Ormstein, 2012: 229-230)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문제가 오늘날 발생하고 있다. 과거 개인적 차원에서의 문제보다는 사회 구조에서 오는 문제가 오늘날 또한 많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볼 수 있는 넓은 시야가 필요하고 넓은 영역에서의 실천이 필요하다. 힘이 닿는다면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보는 경구는 이렇게 바뀌어야 할 것이다. “THINK GLOBALLY, ACT GLOBALLY”(globally+locally).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실천방법에 있어서의 재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즉 “어떤 실천 방법”(how to practice)을 택할 것인가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천을 할 때에 실천 방법에 있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 항상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환경문제에 있어서 보통 삼보일배[三歩一拜]라는 실천방법을 그리스도인들도 사용하는 것을 자주 접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함당한가라는 의문을 해보게 되고, 더 나은 실천 방법은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 III 나가는 말

복지에 대한 논쟁은 색깔논쟁인가. 아니다. 복지에 대한 논쟁은 색깔 논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오늘날 이 사회는 많은 위협에 과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복지에 대한 담론은 진보적 좌파나 보수적 우파나의 담론이 아니라 인간의 삶에 대한 담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복지에 대한 담론은 복지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는 어느 복지정책 결정(자)도 그 정책(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정책결정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평가되어야만 될 것이다.

선별복지나 보편복지나 복지의 범위에 대해 논쟁에 대해 오늘날의 사회·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복지정책은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 지향해야 하겠지만 이 경우에 현실에 있어서 객관적인 복지제정의 확충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한다.

사회적 책임인가 전도인가에 대한 사회복지실천의 목적에 대한 논쟁에 대해 ‘극단적 전도의 수단’으로서의 사회복지실천의 지양(止揚)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삶에서 기본에 충실한 사회복지실천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 문제의 원인이 개인이나 사회적 구조냐에 대한 논쟁의 경우에도, 오늘날 사회문제는 세계화, 경제의 불평등 등으로 인한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임을 감안할 때에 ‘이것이나 저것이나(either/or)의 이분법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개개의 사회문제의 원인에 대한 집중 분석과 더불어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천으로 나아가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과거 교회 내에서 색깔논쟁과 더불어, 전도나 사회적 책임이나, 개인이나 사회구조냐의 논쟁은 성경 해석과의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점<sup>36)</sup>을 감안한다면 기독교세계관에 충실한 성경읽기가

36) 로스앤젤레스의 ‘크렌쇼크리스천센터’(Crenshaw Christian Center)의 담임목회자인 프레드 프라이스(Fred Price) 목사는 최근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교회의 문제는 성경이 아니다. 문제는 성경을 해석했던, 더 정확히 말하자면, 성경을 잘못 해석했던 사람들이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룸이 아닌 캐넌으로 삼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 참고문헌

- 강준만 (2012). 『세계문화의 길과 속』. 서울: 인물과사상사.
- 권경임 (2011). “1장. 종교 사회복지와 영적자원”. 『사회복지실천과 영적 자원』. 신정. 13-44.
- 권명중 (2008). 『경제학 성경에 길을 묻다』. 파주: 21세기북스. 76-89.
- 김광기 (2012). 『정신 차려 대한민국』.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 김동춘 (2003). “교회적 디아코니아와 국가적 사회복지: 사회복지의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교회적 대안인가?”. 『성경과 신학』. 한국복음주의신학회. 305-330.
- 김두식 (2010). 『교회속의 세상 세상속의 교회』. 서울: 홍성사.
- 김윤재 (1999). “한국 기독교 사회복지의 개선방향”. 『敎授論文集』. 3. 291-313.
- 김윤태 (2010). “복지국가의 발전과 도전”.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 한울아카데미. 13-56.
- 김진호 (2012). 『시인 K, 교회를 나간다』. 서울: 현암사.
- 김한옥 (2001). “기독교 사회봉사신학 정립의 필요성.” 『성경과 신학』. 29. 161-188.
- 김호성 (2012). 『자연의 인간, 인간의 자연』. 서울: 후마니타스.
- 도승자 (2011). “신앙기반 지역사회복지관들의 글로벌 사회자본”. 권경임·도승자·유장준 공저. 『사회복지실천과 영적 자원』. 서울: 신정. 185-221.
- 메일경제 분노의 시대 특별취재팀 (2012). 『나는 분노한다』. 서울: 메일경제신문사.
- 박승희 (2012). 『한국사회보장론』.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박종삼 (1988). “한국의 개신교회와 사회복지”. 『한국사회복지학』. 11. 134-147.
- 신광영 (2011a). “1장. 복지는 좌파의 정책일까?”. 김연명 외 공저. 『대한민국복지: 7가지 거짓과 진실』. 두리미디어. 29-53.
- \_\_\_\_\_ (2011b). “결론: 어떤 복지국가로 갈 것인가?”. 김연명 외 공저. 『대한민국복지: 7가지 거짓과 진실』. 두리미디어. 201-218.
- 오건호 (2012).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 서울: 레디앙.
- 윤홍식 (2012a). “서문: 왜 지금 우리에게 연대가 필요한가”. 윤홍식 엮음. 『우리는 한배를 타고 있다』. 서울: 이매진. 7-37.
- \_\_\_\_\_ (2012b). “문제는 세금이다: 보편적 복지국가의 바람직한 조세체제를 찾아”. 조홍식 엮음.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이매진. 236-269.
- \_\_\_\_\_ (2011). “7장. 보편적 복지는 무책임한 퍼주기일까?”. 김연명 외. 『대한민국복지: 7가지 거짓과 진실』. 서울: 두리미디어. 171-198.
- 이국진 (2010). “9. 절반과 네 갑절”. 『돈인가 예수인가?』. 서울: 열린말씀. 148-163.
- 이병천 (2012). “정글자본주의에서 참여자본주의로”. 조홍식 엮음.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서울: 이매진. 191-235.
- 이상이 (2012). 『복지국가가 내게 좋은 19가지』. 서울: 메디치.
- \_\_\_\_\_·김윤태 (2012). 『내 아이가 살아갈 행복한 사회』. 서울: 한권의책.
- 이원규 (2010). 『한국교회의 위기와 희망』. 서울: KMC.

이 성경을 가져다가 그 메시지를 조작하여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한 인종을 노예로 삼고 학대하는 것을 정당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버려야만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원래부터 성경이 문제였던 것은 아니다. 문제는 이른바 성경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있었다.”(White, 2005: 242 재인용)

- 이은경 (2012). “13장.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만들자”. 정태인의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리셋 코리아: 18대 대통령이 꼭 해야 할 16가지 개혁과제』. 미래를 소유한사람들. 368-395.
- 장은주 (2012). “복지국가, 하나의 ‘시민적 기획’: 분배정의를 넘어서는 한국 복지국가의 도덕적 기초”. 조홍식 엮음.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이매진. 152-190.
- 장하준 (2011). “좋은 시민, 개혁을 말하다.” 장하준 외. 『불량사회와 그 적들』. 알렐. 15-47.
- \_\_\_\_\_ (2008). “사회복지가 곧 경쟁력이다.” 최장집 외.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서울: 프레스아북. 225-246.
- \_\_\_\_\_ (2004). 『개혁의 뒷』. 서울: 부키.
- \_\_\_\_\_·정승일·이종태 (2012).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서울: 부키.
- \_\_\_\_\_·정승일 (2006). 『왜도난마 한국경제』. 서울: 부키.
- 정무성 (2005). “한국 기독교사회복지 자원 동원의 쟁점과 과제”. 『한국교회의 사회복지와 기독교 생명운동』.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 정수남 (2010). “기독교 관련 단체의 노숙인 구호 활동: 평가와 전망”. 『한국의 종교와 사회운동』. 서울: 이학사. 411-441.
- 정영철 (2012). “연대, 분단의 질곡을 넘어서”. 『우리는 한배를 타고 있다』. 이매진. 101-115.
- 정종태 (2012). 『우리가 모르는 미국의 두 얼굴』. 서울: 한국경제신문.
- 조경애 (2012a). “1장. 무상의료 스무 고개”. 『무상의료란 무엇인가』. 이매진. 18-84.
- \_\_\_\_\_ (2012b). “99퍼센트를 위한 무상의료, 무상 입원부터 시작하자”. 『무상의료란 무엇인가』. 이매진. 184-204.
- 조홍식 (2012). “서문: ‘어떻게’ 복지국가를 실현할 것인가”. 조홍식 엮음.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이매진. 6-29.
- \_\_\_\_\_ (2010).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보편주의 원칙”. 『보편적 복지와 6·2지방선거』. 참여연대 발간자료.
- 차경식 (2012). 『예수, 한국사회에 답하다』. 새물결플러스.
- 참여연대 (2012). 『고장 난 나라 수선합니다』. 서울: 이매진.
- 홍기빈 (2011). 『미그포르스, 복지 국가와 잠정적 유포티아』. 서울: 책세상.
- 현외성 (2011). 『사회복지운동론』. 고양: 공동체.
- Addams, J. (1990). *Twenty Years at Hull House*. 심재관 역 (2008). 『헐 하우스에서 20년』. 지식의숲.
- Alesina, A. & Glaeser, E. L. (2004). *Fighting Poverty in the US and Europe*. 전용범 역 (2012). 『복지국가의 정치학』. 파주: 생각의힘.
- Barker, D. (2008). *Godless*. 공윤조 역 (2011). 『신은 없다』. 서울: 치우.
- Burchett, D. (2002). *When Bad Christian Happen to Good People* 김애경 역 (2006). 『나쁜 크리스찬』. 선미디어.
- Chang, H.-J. (2007). *Bad Samaritans*. 이순희 역 (2007). 『나쁜 사마리아인들』. 서울: 부키.
- \_\_\_\_\_·H.-J. (2002). *Kicking Away the Ladder*. 형성백 역 (2006). 『사다리걸려차기』. 부키.
- Collins, C. (2012). *99 To 1*. 이상규 역 (2012). 『왜 세계는 불평등한가』. 서울: 이상.
- Conn, H. (1981). *Bible Studies in Evangelization and Simple Lifestyle*. Carlisle: Paternoster.
- Cox, H. (2009). *The Future of Faith*. 김창락 역 (2010). 『종교의 미래』. 서울: 문예출판사.
- Delpeuch, F. M., B. Monnier, E. and Holdsworth, M. (2009). *Globesity*. 부회령 역 (2012). 『강요된 비만』. 서울: 거름.
- Ehrlich, P. R. & Ornstein, R. (2010). *Human on A Tightrope*. 고기탁 역 (2012). 『공감의 진화』. 서울: 에이도스출판사.

Galligan, J. (2011). *Why Some Politicians Are More Dangerous Than Others*. 이회재 역 (2012).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 교양인.

Gilens, J. (1999). *Why Americans Hate Welfare*. Chicago University Press. 임자현 역 (2012). 『왜 미국인들은 복지를 싫어하는가』. 서울: 영림카디널.

Jochem, S. (2012). “유럽 복지국가의 형성과 변화: 유럽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조홍식 엮음. 『대한민국, 복지국가의 길을 묻다』. 서울: 이매진. 105-150.

Keller, T. (2010). *Generous Justice*. 최종훈 역 (2012). 『팀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 두란노.

\_\_\_\_\_, T. (2009). *Counterfeit Gods*. 이미정 역 (2012). 『거짓 신들의 세상』. 서울: 베가북스.

Krugman, P. (2007). *The Conscience of a Liberal*. 예상한 3인 공역 (2009). 『폴 크루그먼 미래를 말한다』. 서울: 웅진씹크빅.

Lincoln, B. (2003). *Holy Terrors*. 김윤성 역 (2005). 『거룩한 테러』. 과주: 돌베개.

Lindert, P. (2004). *Growing Public*.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Midgley, J. (1997). *Social Welfare In Global Context*. 신삼중 역 (1999). 『국제사회복지』. 서울: 대학출판사.

Margoshes, D. (1999). *Tommy Douglas: Building the new society*. 김주연 역 (2012). 『또 다른 사회는 가능하다』. 서울: 낮은산.

Marsden, G. (1980). *Fundamentalism and American Culture*. Oxford University Press. 85-93.

n+1, (2011). *Occupy*. 유영훈 역(2012). 『점령하라』. 서울: 알에이치코리아.

Peters, R. T. (2004). *In Search of the Good Life*. 방연상·윤요한 공역 (2012). 『좋은 세계화 나쁜 세계화』. 서울: 새물결플러스.

Reimon, M. and Felber, C. (2003). *Schwarzbuch Privatisierung* 김효균 역 (2010). 『미친 사회화를 멈춰라: 민영화, 그 재앙의 기록』. 서울: 시대의 창.

Sider, R. (2005). *Rich Christian in an Age of Hunger*. 한화룡 역 (2009).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 개정판. 서울: IVP.

Singer, P. (2009). *The Life You Can Save*. 함규진 역 (2009).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 산책자.

Stiglitz, J. E. Ocampo, J. A. Spiegel, S. & Ffrench-David, R. (2006). *Stability with Growth* 노승연 역 (2011). 『이단의 경제학』. 서울: 시대의창.

Stott, J. R. W. (1999). *New Issues Facing Christians Today*. 정옥배 역 (2005).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IVP.

Wahl, A. (2011). *The Rise and Fall of Welfare State*. 남인복 역 (2012).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서울: 부글북스.

White, R. (2003). “이슬람국가운동에 관한 까다로운 질문들”. Zacharias, R. & Geisler, N. (Ed). *Who Made God?* 박세혁 역 (2005). 『누가 하나님을 만들었을까』. 사랑플러스. 238-263.

Wolterstorff, N. (1983). *Until Justice and Peace Embrace*. 홍병룡 역 (2007).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출 때까지』. IVP.

## 사회복지 이슈와 기독교세계관에 대한 논평

김의명  
(대구대학교)

먼저 사회복지이슈에 대한 방대한 양의 논문에 대해 필자의 노고를 치하합니다. 그러나 양이 방대한 만큼, 지적을 요하는 사항 역시 눈에 띄는 것이 많아, 이에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제목 : 상기논문에서는(이하 논문) 연구 문제를 둘로 설정하였고, 두 번째 연구 문제는 3분야로 나누어 기술하였습니다. 사회복지의 이슈는 그 방대함이 거의 무한에 가까운데, 사회복지 이슈라는 제목 아래 가치관, 목적, 사회문제를 모두 다루었기 때문에, 각 이슈에 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논의와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독교세계관 역시도 성경적인 근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개념에 대해서 전혀 구체적인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개념정의와 내용이 매우 피상적이고, 내용 역시도 인용을 중심으로 하여 역시 피상적이고 매우 산만한 느낌을 줍니다.

연구 문제(종합적인 측면)

1)연구 문제를 보면 분류오류(category mistake)현상이 역력합니다. 우선 연구문제1은 색깔논쟁에 관한 것으로 사회복지의 이념에 관한 내용 같은데 이념과 정치제도를 혼용하여 쓰는 경향이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듯 하고, 연구 문제2에서는 “2-1 복지 범위”는 사회복지에 관한 내용이고, “2-2 복지목적 ”은 기독교 사회복지를 의미하고 있고, “2-3 문제 원인”은 일반적인 사회복지의 존재이유가 되는 사회문제에 대한 언급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란 용어는 좀 추상적이고 일반적이 용어로서, 본 논문에서 다루어지는 “복지”는 전문적인 사회과학의 분야인 “사회복지”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한 논문에서 사회복지 이념적 배경, 기독교 사회복지의 목적, 사회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것은 논문의 심층적인 분석이 불가능하지 않다면,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연구문제(개별적인 측면)

1)연구문제 1 : 복지논쟁: 복지에 대한 논쟁은 색깔 논쟁인가?

(1)용어

색깔논쟁이란 용어는 일반적인 용어로 전문 학술논문에 제목으로 적합치 않다고 봅니다.

(2)정의

“ 색깔 ”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고, 12~ 13쪽에 보면 “색깔논쟁 즉 나쁜 이념” “복지의 문제를 색깔(나쁜 이념)” 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좋은, 나쁜”의 주관적 은 표현은 객관성을 중시하는 사회과학에서는 전혀 적절하지 않으며, 색깔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예; 붉은색 - 좌를 상징, 청색 - 우를 상징),색깔을 하나의 나쁜 이념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중대한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에서 잠시 언급한대로, 색깔논쟁의 내용이 이념